

# '살해후 자살조작' 최종결론 낼듯

## 발표만 남긴 허원근 일병 의문사 종합점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진상조사가 7일 최종보고와 10일 조사결과 발표만을 남긴 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의문사위의 2차례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와 현장 실지조사 등을 종합해 보면 '자살이 아닌 타살이며 자살조작과 은폐에 군간부가 개입했다'는 최종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아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중대장의 흑사를 비판해 소총 3발을 쏜 자살했다'는 군당국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목격자 일부가 핵심사안에 대해 의문사위 발표내용을 부인하는 데다, 1999년 사망한 중대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자살인가 타살인가=84년 4월2일 새벽 허일병이 배속된 육군 7사단 전방부대 내무반에서 총격현장을 목격한 이모호사와 전모상병은 "새벽 2-4시 사이 숲자리에서 대대장과 말다툼을 벌인 노모중사가 내무반으로 와 M16소총을 들고 행패를 부리다 쓴 총탄 1발이 허일병의 오른쪽 가슴을 관통했다"고 의문사위에 진술했다. 전상병은 "허일병의 피가 내뿜어까지 튀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부에서 200여m 떨어진 14소초에 근무했던 사병도 "2일 오후 현장에 있던 동료에게서 '허일병이 타살됐는데 자살로 위장하려 사체를 현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얘길 들었다"고 증언했다.

중대본부 상환실은 이날 오전 4-6시 허일병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소초병 이모씨는 "아침 일찍 중대본부에 들렀다가 입구에서 허일병 사체를 봤다"고 증언했다. 이는 적어도 "2일 오전 9시50분쯤 중대본부 인근 폐유류고에서 총 3발을 쏜 자살했다"는 군당국의 조

### 중대장이 지시된 대대장과 대책논의 협의 윗선 문책 피하려 조직적 은폐 가능성 의문사 위단 재조사 요구등 파장 예상

사결과가 틀렸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그러나 허일병을 쏘았다고 의문사위가 지목한 노중사는 이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은폐·조작은 누구의 지시였나=이모호사와 전상병은 "사건 직후 허일병을 중대본부 밖으로 옮긴 뒤 중대장이 사병들을 한명씩 중대장실에서 불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허일병의 핏자국을 닦기도 전에 대대장과 보안주재관이 중대본부로 와 대책을 논의했으며, 대대장은 내무반 사병들에게 '중대장 지시대로 잘 움직이라'고 지시한 뒤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는 중대장실에서 이뤄진 대대장과 중

허원근 일병 사건 상황별 일지

1984년 4월 1일 0시	내무반 중대장실에서 중대장, 소대장, 노모중사 등 숲자리 허원근 일병 등 사병 10여명 내무반 대기, 일부 숲자리 좁은 중대장 안주부실 이유로 허일병 구타
오전 2-4시	중대장과 노모중사 사적인 일로 말다툼
오전 4-6시	노중사 사병들에게 행패부리다 허일병에게 M16소총 1발 발사 허일병 응급처치 없이 방치
4월 2일 오전 6-7시	중대장 대대상환실과 대대장에게 전화로 '자살사건'으로 발생 보고 연대장에게도 '자살'로 보고
오전 10-11시	대대장이 중대본부 방문, 중대장과 논의 허일병의 핏자국 청소
오후 1-1시30분	중대본부 인근 폐유류고 근처로 허일병 옮긴뒤 소총 2발 발사
4월 2-17일	중대장이 '허일병 자살' 공식보고
4월 28일	사단 헌병대가 중대본부원 전원조사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 의혹제기
4월 28일	'허일병' '중대장의 흑사를 비판한 자살'로 공식 발표

대장 등의 논의과정에서 은폐대책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대장은 사건 당일 3중대본부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은폐이유는=군 관련 전문가들은 84년 당시 상황상 사병의 자살 사건 보다 휴전선 철책근무 시간에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 훨씬 무거운 문책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을 지적한다. 자살사건이라면 중대장 문책선에서 끝나지만, 후자의 경우 그 윗선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 "84년초는 전년도의 아웅산 테러사건과 KAL기 폭파 사건 등으로 남북이 극도의 긴장관계에 있던 시

기"라며 "당시 휴전선 초소를 비워 두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중대사건"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이 18년 뒤에도 침묵하는 이유는=신경과 전문의들은 현장 목격자들 사이에서 '자살'과 '타살' 주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연세의료원 신경정신과 장기립전문의는 "공범의식이나, 진실이 밝혀졌을 경우 되돌아올 불이익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기피심리가 작용하면 사건 은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범죄심리학)는 "우발적인 사고였을 경우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심의 가책이 희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교수는 특히 "노근리 사건 등에서 보듯, 군처럼 결속력이 강한 집단에서는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한다'는 집단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오남석·노윤경기자  
greentea@munhwa.co.kr

# "허일병사건 헌병대가 허위진술 강요"

## 의문사규명위원회 밝혀

1984년 군부대에서 술 취한 상사의 총에 맞아 숨진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건을 조사했던 군 헌병대가 그대로 진술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당시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던 같은 부대 사병 모씨가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몇 차례 써냈고 헌병대 수사관들이 이를 조합해 없었던 사실을 넣어 진술서를 만든 뒤 그대로 의뢰 쓰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6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당시 사병들이 "헌병대 조사 이후 재수사를 나섰던 육군범죄수사단도 헌병대 조사기록을 펼쳐놓고 단순히 요약해서 베끼는 식의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손호림기자 arysong@donga.com

# "헌병대서 현장 탄피숫자 조작"

## '허일병사망' 중요단서 의문사규명위서 주장

1984년 군복무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 사건을 조사했던 군 헌병대가 당시 허일병의 자살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인 현장 탄피개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최근 확보한 당시 헌병대 수사기록에는 허일병의 사체가 발견된 폐유류고에서 회수한 탄피와 실탄의 수가 '탄피 3개, 실탄 73발'로, 비교란에는 '시험사격탄으로 사용한 탄피를 첨부'했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는 당시 헌병대가 '허일병이 자살을 위해 3발을 쏘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나머지 탄피 1발은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면서 "하지만 헌병대는 나중에 한 발의 탄피를 현장에서 찾았다고 반복해 탄피개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기록에는 전방근무규정에 의해 75발이 들어있어야 할 허일병의 총에 73발의 총알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어 허일병이 세 발의 총알을 쏜 자살했다는 헌병대의 조사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 의문사 허일병 사건 중요단서 “헌병대, 탄피개수 조작”

## 의문사 “조사결과 조작”

1984년 군에서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 사건을 조사 중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군 헌병대가 자살여부 확인에 중요한 단서인 현장 탄피개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확보한 당시 헌병대 수사기록 압수목록에 따르면 허일병의 사체가 발견된 폐유류창고에서 회수한 탄피와 실탄개수가 '탄피 3개, 실탄 73발'로 기록돼 있다.

이 자료대로 허일병의 총에 73발이 남아있었다면 75발의 총알이 지급되

는 전방근무규정에 비춰볼 때 세 발로 자살했다는 당시 헌병대의 조사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상규명위는 또 당시 헌병대 수사과정에서 헌병대가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사병들에게 진술서를 강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후 재수사한 육군범죄수사단도 헌병대 조사기록을 펼쳐놓고 베끼기만 하도록 하는 식의 형식적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0일 허일병 의문사 사건에 대해 '타살 후 자살조작'이라는 방향의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은해기자 justice@kmib.co.kr

# “허일병 자살 현장 탄피개수 오락가락”

## 의문사위 '개수조작의혹' 밝혀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 군 헌병대가 당시 허 일병의 자살현장이라고 주장한 폐유류 창고에서 회수한 탄피의 개수를 모호하게 처리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당시 헌병대 수사기록 압수목록에 따르면 탄피와 실탄 개수가 각각 3개와 73발로 기록돼 있고, 비고란에는 '시험사격탄으로 사용 후 탄피를 첨부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 헌병대는 당시 '허일병이 자살을 위해 쏘는 3발 가운데 나머지 한 발의 탄피를 찾지 못했다'고 해놓고, 3~4일 뒤 추가로 '세 발의 탄피가 삼각점을 이루며 다 있었다'며 번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기록에 전방근무규정에 의해 75발이 들어 있어야 할 허 일병의 총에는 73발의 총알만이 남아 있어 헌병대가 '허 일병이 세 발을 쏘 자살했다'는 조사 결과를 맞추기 위해 탄피 개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황현택기자 larchide@sgt.co.kr

# “許일병은 타살” 최종결론

## 의문사위, 조사결과 발표 자살위장 총격지는 안밝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지난 1984년 강원도 육군 제7사단에서 사망한 허원근(당시 22세)일병 사건에 대해 “허일병은 타살됐다”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의문사위는 “84년 4월 2일 오전 2~4시 7사단 3연대 1중대 3중대본부에서 노모중사가 술에 취해 사병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발사한 총 1발이 허일병의 오른쪽 가슴을 관통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특히 재미법의학자 노용면(미국 뉴욕 거주)박사의 소견서에 의거, “허일병이 1차 총격을 받은 뒤 2차로 2발의 총을 맞기까지 7~8시간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박사는 소견서에서 “(허일병이 2차 총격을 받은)좌측 흉부와 두부 총상 모구(구멍)에서 출혈이 이뤄진 것에 비춰 2차 총격을 받을 때까지 심장박동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그러나 당시 사건을 자살로 은폐하는데 개입한 군고위 간부와 자살위장용 총 2발을 추가로 쓴 인물은 특정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의문사위는 “핵심인물인 중대장 김모대위가 99년 사망한데다 2차 총격을 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참고인들이 진술을 회피해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kr

인터뷰

허일병 의문사관련 타살 발표한 의문사규명위  
김준곤 제1상임위원

# “허원근 일병은 타살됐다”



김준곤 (사진) 의 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은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

수사발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증언자들이 진술을 꺼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분명한 사실은 허일병은 당시 수사결과와는 달리 중대 근무자에 의해 타살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위원은 “논란이 된 부분은 제외하고 상임위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만 오늘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허일병의 타살 조작·은폐 주장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추가 총격 당사자’와 ‘조작·은폐 최종 지시자’ 등은 위원회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이날 “위원회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시간 미비로 많은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국회의원들에

게 법개정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오는 16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문사규명위원의 일문일답.

-허일병 사건의 자살·타살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헌병대의 당시 조사 발표와는 달리 허일병이 중대 근무자에 의해 타살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재미법의학자인 노용면, 노여수 박사의 감정과 실제 조사에서 이를 확인했다.”

-노용면 박사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나.

“위원회의 조사기록과 당시 헌병대의 조사결론 등을 근거로 판단을 의뢰했고 노박사가 입장을 보내왔다. 노박사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감정에) 오랜 시일이 걸렸다.”

-헌병대 수사과정에서 감압이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했다.

“헌병대 감압수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언론에 2차 조사발표가 공개된 이후 더 이상 조사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조사 종료시간이 다가와 더 이상 조사하기 어

려웠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의 조사에 협조할 생각인가.

“(국방부로부터) 조사에 대해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협조 여부는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국방부나 제3의 기관이 위원회와 다른 결과를 발표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타살증거 확보...위원회 명예 걸겠다”

“타살로 주장한 두 사람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우리는 확보했다. 이를 모두 뒤엎을 수 있고 우리가 수궁할 결과를 내놓는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판단에 위원회의 명예를 걸겠다.”

-기간만 연장되면 ‘추가사실’을 밝힐 수 있는가.

“시간의 연장은 권한의 강화와 맞물려 있다. 조사에 걸맞는 권한이 없으면 시간이 연장되도 진실 접근은 힘들다. 우리는 증인 보호조치가 없다. 증언자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 Commission Concludes Army Covered Up Murder of Soldier

By Seo Soo-min  
Staff Reporter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concluded yesterday that the army systemically falsified evidence regarding Pvt. Ho Won-kun's death 18 years ago.

The fact-finding commission's final report on the soldiers' death confirmed its earlier findings that Ho was shot in the chest by a drunk officer in the early morning of April 2, 1984.

In a bid to cover up the incident, senior officials took Ho's body to a waste oil storage facility located 30 meters away from the barracks where Ho was initially shot during a party, the

commission said.

"After the battalion commander and the company commander discussed the accident and decided to misrepresent the shooting as a suicide, two other bullets were fired into Ho's head," the commission's report said.

Ho might have survived until then, the report added.

An American forensic expert, Noh Yong-myun, said Ho "may have been alive for seven to eight hours after the first shot" in his review of evidence sent to the commission after the investigation reopened this year.

Military investigators in 1984 ruled Ho's death as "a suicide caused by a senior officer's

abuse" after a three-day probe.

However, the commission decided not to reveal the identity of the soldier who allegedly shot Ho two more times, nor the one who moved Ho from the barracks to the oil warehouse.

"We only have limited testimonies on the issue," a commission official said.

The case now goes to the Defense Ministry, which opened a special investigation on the matter.

Defense Minister Lee Jun said the military will use all its resources to discover the truth about the soldier's death and win the nation's confidence.

ssm@koreatimes.co.kr

# 타살뒤 은폐·조작 결론

## 규명위 최종발표...첫총격 선임하사는 계속 부인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조사해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1984년 부대 안에서 자살한 사건으로 종결됐던 허 일병 의문사는 오발 사고를 자살로 조작·은폐한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의문사위는 이날 "허 일병은 사건 당일인 1984년 4월2일 새벽 중대본부에서 벌어진 술자리 끝에 선임하사노 아무개씨가 사병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허 일병은 이날 오전 10~11시 사이에 다시 두 발의 총알을 맞을 때까지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2차 총격을 가한 사람과 그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다.

허 일병이 쓰러진 뒤 이 사고는 지휘계통을 따라 중대장으로부터 대대장, 연대장에게 '자살'로 보고되었으며, 대대장 전아무개씨는 당시 헌병대가 허 일병의 사망시각으로 발표한 오전 10시 이전인 이날 아침 6~7시 사이에 보안주재관 허아무개씨와 함께 중대본부 사고현장을 다녀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대장 전씨는 사고현장 방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보안하사관 허아무개씨는 사고 조사차 중대본부에 들른 것은 오후라고 진술한 것으로 의문사위는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당시 허 일병 주검을 부검한 박아무개씨가 "오른쪽과 왼쪽 가슴에 모두 생활반응(총을 맞을 당시 육체가 살아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응)이 발견됐으며, 총탄 한 발을 맞은 뒤에도 7시간 가량 살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진술한 것 등을 근



※전아무개씨(당시 중대본부 사병) 증언에 따른 것임

거로 허 일병이 머리에 마지막 총상을 입을 때까지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 발표에 대해 허 일병을 쏜 장본인으로 지목된 선임하사노 아무개씨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훈 기자

### 이준 국방, 철저조사 지시

이준 국방부 장관은 10일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캐내야만 국민들의 모든 불신과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수성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육군 중장)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내용도 존중하도록 하라"고 했다고 정 위원장이 전했다. 김성결 기자 skkim@hani.co.kr

## 동료들 외면하고 두려움·외로움 커지고...

# '허일병 타살' 증언 두 사병 "우리 진실 누가 지켜주나"

1984년 군부대에서 '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허원근 일병 사건이 18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두 사병이 '진실의 입'을 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총을 쏘았다는 노아무개씨와 그 밖의 사병들이 상황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심적 갈등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명위마저 사라지면...

새벽 1차 총격과 물청소 등 당시 중대본부 막사 안의 상황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당시 부대 사병이었던 전아무개씨와 이 아무개씨다. 전씨는 의문사위원회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언급했고, 또 지난 3일 허 일병이 숨졌던 7사단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열린 현장조사에도 참가했다.

현재 지방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전아무개씨는 지난 7일 밤 <한겨레> 기자와 만나 "대다수 목격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 혼자서 그렇다고 말하기가 무척 겁난다"고 말했다. 또 "당시 동료들이 전화를 걸어와 '너 왜 그러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때마다 극심한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진다"고 털어놓았다. 전씨는 지금 종업원 4~5명을 둔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 나 혼자서 진실을 말하다가 이나마도 먹고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겁난다"며 전씨는 인터뷰 내내 "겁난다"라는 말을 계속 내뱉었다.

전씨는 특히 의문사위원회의 시한 만료에 커다란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전씨는 "위원회마저 사라져 버리면 누가 나의 진실을 방어해 줄 것인가?"라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전씨는 최근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전씨는 "내가 '진실'을 밝힐

때는 내 진술을 토대로 다른 목격자들도 돌아오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점점 무너져 가는 것 같다"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 '현장조사' 끝내 발길 돌려

허 일병이 내무반에서 흘린 피를 닦아냈던 물청소 상황 등을 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진술한 이아무개씨는 전씨와 함께 지난 3일 7사단 현장조사에까지 나섰으나, 이날 아침 화전읍내까지 왔다가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불안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대다수 목격자들이 상황을 부인하고 있는 판에 나 혼자서 현장을 재연할 수 없다. 위원회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가?"라며 자신을 붙잡는 위원회 관계자들의 손을 뿌리쳤다. 그러나 그는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내가 한 진술은 모두 나의 기억 한도 안에서 진실"이라고 말했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군부대 사망사고

지난해 12월 전만고(당시 23세)소위는 부산의 한 부대에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소대원을 데리고 긴급 출동했다.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찰은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소위의 형인 진서(27)씨는 지난달 동생의 부대에 사인(死因) 재조사를 요청했다. 어렵게 입수한 해당 부대의 사건 당일 상황일지에 '총기 실탄 제거 중 오발사고'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진서씨는 "얼마 전 현병대 수사관이 '여자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났으니 그만 포기하라'며 여자 편지를 슬쩍 내보였는데 그 편지가 다름아닌 내 애인이 동생에게 보낸 안부 편지였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부대 관계자로 부터

年2백여건 중 자살 처리 40%

수사 미공개... 유족 "못 믿겠다"

'진급을 앞둔 사단장이 사고사가 발생하면 피해를 볼까봐 사건을 자살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강숙희(33·여)씨는 군에서 죽은 동생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9개월째 동문서주하고 있다.

하시관으로 자원입대한 동생의택(당시 20세)씨가 지난해 11월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한 다음날 사망했기 때문이다.

당시 군 당국이 발표한 췌하사의 사인은 '진급 누락에 따른 비관 자살'. 그러나 췌씨는 군의 발표를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부대 인근 지하병커에서 머리에 실탄 현발을 봐 자살했다는 발표와 달리 동생의 머리에 두방의 총상 구멍이 나 있었던 데다 가슴엔 선명한 타박상까지 있었다. 췌씨는 "동생이 꿈에 나타나 '타살'이라고 쓰인 메모지를 건네고 사라지곤 한다"며 울먹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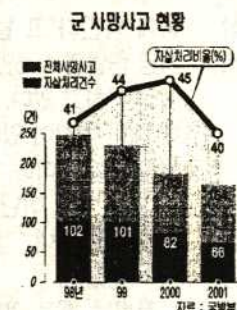
두 사례 모두 군이 해당 군인들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은폐했음이 드러난 경우는 아니다.

하지만 군 검찰이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한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1998년 이후 한해 평균 2백여건에 달했다. 90년 걸프전 때 미군 측 전체 사망자 수가 2백60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숫자다. 이중 자살 처리 비율은 40%에 이른다.

자살 처리 건수가 많다 보니 군의 자살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유가족들이 늘고 있다. 유가족들이 군의 자살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군 당국의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군에선 보안을 이유로 수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족들이 직접 나서 재조사를 요구하더라도 "타살 혐의자나 증거가 없으면 자살"이라는 모호한 결론이 내려지



기 일쑤다. 의문사건규명위원회 김준근 제1상임위원은 "자살 발표 전까지의 조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데다 수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 유가족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망사고를 담당하는 국방부 관계자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족들이 국가기관인 군 수사기관의 발표를 너무 믿지 않는다"며 "유가족들과는 접해볼 수 없는 견해차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쉬쉬' 하는 軍... 의혹 키운다



지난달 27일 서울 국방부 앞에서 군 복무 중 숨진 군인들의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최정호 기자

사단장 지휘 받는 군검찰 대신 일반 검찰·경찰에 수사 맡겨야

문제점

유가족들은 군의 사망사고 처리 절차가 '엠티라'라고 비난한다.

사망사고 처리 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군 수사기관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단기간에 조사를 마친다는 점이다.

현재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1989년에 개정된 국방부 훈령 '전공사상자 처리규정'에 따라 24시간 안에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전문으로 보고한 뒤 7일 내에 사망진단서와 사망확인 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전문보고는 1차 수사를 맡은 해당 부대의 한병대가 작성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군 검찰이 이후 조사를 지휘해 조사를 작성한다.

유가족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자칫 지휘관이 책임질 수도 있는데, 사단장의 지휘를 받는 해당 부대의 군 검찰과 한병대가 7일 만에 종결하는 수사의 결과가 과연 공평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특별한 경우 국

7일 만에 조사 마무리  
보안 이유 자료공개 안해  
방부 통 상급기관  
에서 재조사하지만 최초 조사 결과를 번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 또한 신뢰를 잃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98년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99년 발족해 30개월간 활동했던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당시 진정 접수된 1백66건의 자살 사건 중 단 한 건의 사망원인도 뒤집지 못했다.

보안을 이유로 일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준(63)씨는 "18년간 그렇게 뛰어들었지만 중요한 단서가 될 상황일지 등을 아직 입수하지 못했다"면서 군 수사의 폐쇄성을 꼬집었다. 지난 7월 숨진 최도 일병의 유가족들은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하다 해당 부대로부터 무단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해결책

국방부 한 관계자는 10일 의문사진상

규명위가 허원근 일병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타살로 발표하자 "한해 1백건 가까이 발생하는 자살사고에 대한 이의가 폭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군도 억울하다"며 "정병제란 특수성을 감안해 나름대로 성의있게 수사하는데 유가족들이 도무지 믿어주질 않는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군내 사망사고 조사 규정을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군 법무관 출신 임종인 변호사는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 검찰은 사단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며, 기소 여부 결정도 사단장 결재를 받게 돼 있다"며 "이로 인해 군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대 법학과 이계수 교수는 "독일·일본·프랑스 등에서

군 내 사고라도 일

수사·기소권 軍檢이 독립  
반 검찰·경찰에  
유족들,민간인 참여 요구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군 의문사 처리절차의 비공정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교수는 "군 검찰이 변과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군 의문사 수사에 민간

인 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측인대 이은경 사무총장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군 의문사 상설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지난해 군사법원법 등을 검토한 뒤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냈다.

남궁욱 기자

### 의문사위, 허원근 일병 '타살' 최종 결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1984년 군 복무 중 자살했다고 발표했던 허원근(당시 22세)일병 사건에 대해 "許일병이 같은 중대 간부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결론내렸다"는 최종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許일병 소대 동료 중 일부의 진술과 법의학자 소견, 그리고 대대와 연대 상황병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며 "許일병은 84년 4월 2일 오전 2~4시 사이 만취상태인 盧모 중사가 쓴 총에 맞은 뒤 이를 은폐하려는 부대 관계자들에 의해 두발의 실탄을 더 맞고 숨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사망 시간과 관련해 재미 법의학자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許일병이 첫 총상을 입은 뒤 7~8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서를 보내왔다"면서 "이는 許일병이 실탄 세발의 연달아 쏘 자살했다는 군 헌병대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실탄 두발을 누가 쏘는지▶사건의 은폐·조작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선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은 있으나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 "허일병은 타살" 최종결론 의문사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10일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허 일병이 타살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가진 허원근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서

"허 일병이 스스로 우측 가슴에 한 발을 발사했지만 치명상을 입지 않자 다시 좌측 가슴과 우측 눈썹 부위에 한발씩 발사해 자살했다는 군의 발표와는 달리 같은 중대 근무자에 의해 타살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許일병 자살 아닌 타살 軍 은폐조작은 확인못해"

## 의문사위 최종 발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10일 "지난 84년 4월 2일 군복무 중 사망한 허원근 일병은 자살했다는 당초 군 발표와 달리 타살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의문사위는 그러나 군이 조직적으로 허 일병 사건을 타살로 은폐·조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대장을 비롯한 상급부대에서 조직적으로 허 일병 사건을 은폐·조작했다"는 지난달 20일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의문사위는 발표문에서 "허 일병은 사고 당시 중대본부에서 술에 취한 노모 중사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는 분명한 증언이 있다"며 "당시 중대장(99년 사망)이 이를 대대 상황실에 자살로 보고, 은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언자의 진술을 담은 녹음·녹화테이프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

했다.

지난 2차 중간조사결과 발표 때 사단 헌병대가 부대원들을 고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자살로 조작·은폐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시간과 권한의 제약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당초 주장을 번복했다. 2·3번째 충격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로

위원이 2차례에 걸쳐 조사내용을 검토·토론한 끝에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만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대장급에서 타살을 자살로 은폐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시 7사단 헌병대장

## "中士총에 사망" 진술담긴 녹음 공개안해 2~3발째 총쏘사람도 못밝혀 논란 여지

누가 쏘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다만 허 일병이 처음 1발을 맞은 뒤 7~8시간 뒤 2·3번째 총격을 당했다는 당초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법의학적으로 그같은 증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재미(在美) 법의학자 노용면 교수의 소견을 공개했다.

의문사위 김준곤(金煥坤) 상임위원은 "오늘 발표 내용은 6명의

과 헌병대 조사계장 등 2명은 지난 5일 의문사위 韓相範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허 일병의 소속 부대원들도 "곧 의문사위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오는 14~16일 사이 허 일병이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廉康洙기자 ksyoun@chosun.com

# '허일병 타살후 은폐' 결론

## 의문사위...95년 노점상 사망도 '의문사'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1984년 부대 내에서 총을 쏘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술자리에서 발생한 오발사고를 군이 자살로 조작·은폐한 사건'이라는 이전의 발표를 최종확인했다.

의문사위는 10일 최종조사결과를 발표, "허일병이 중대본부에서 만취한 선임하사관이 오발한 총에 맞았으며 이후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 2발을 추가로 맞아 숨졌고 중대장 등은 이를 자살로 은폐·조작했다"고 결론지었다.

의문사위는 또 이날 95년 노점상 절거에 항의해 담루에 올라가 싸우다 의

문의 죽음을 당한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당시 27세)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나 '의문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날 "노점상 절거반대 투쟁은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당시 구청에서 농성자들에 대한 식품과 의약품 공급을 차단한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일병 사건이 국방부로 넘어옴에 따라 이준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정수성 육군중장)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박성진·안홍욱기자

# "허일병은 타살" 최종 결론

## 의문사위 결과발표... 은폐 지시인물은 확인 못해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 84년 부대내에서 총을 쏘 자살한 것으로 군이 발표했던 허원근 일병 의문사에 대해 술자리에서 발생한 오발사고를 군이 자살로 조작·은폐한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진상규명위는 10일 최종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일병은 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 7사단 3중대 본부내에서 벌어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선임하사관이 오발한 총에 맞았고 이후 살아있던 상태에서 총 2발을 추가로 맞아 숨졌으며 중대장 등이 이를 자살로 은폐·조작했다"며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확인했다.

진상규명위는 재미법의학자 노용

면 교수에게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결과 "허일병의 왼쪽 가슴과 머리부분 총상 모두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미뤄 2~3번째 총상때까지 심장박동이 있었던 듯하며 허일병이 첫발을 맞은 후 7~8시간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누가 사건의 조작·은폐를 지시했으며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당초 타살혐의를 두고도 현병대 수사과정에서 자살로 결론이 내려진 경위 등에 대해서는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운해기자

## e-메일 불법열람 지시 회사간부 執猶2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 판사는 10일 회사직원들의 E메일을 불법 열람하도록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기획조정실 이모 부장(3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E메일을 불법 열람한 이 회사 직원 이모씨와 유모 감사팀장에 대해서도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 허일병 추가 피격전 생존

## 의문사위, 타살·조작 결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지난 84년 군에서 의문사한 허원근(許元根) 일병이 술에 취한 부사관 노모씨가 쏜 총에 맞아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 자살로 조작하기 위해 2발의 총격이 추가로 가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규명위는 "허 일병은 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 7사단 3중대본부내에서 벌어진 술자리에서 부사관이 오발한 총에 맞았고, 이후 생존한 상태에서 총 2발을 추가로 맞아 숨졌다."면서 "중대장 등이 이를 자살로 은폐·조작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재미 법의학자 노용면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왼쪽 가슴과 머리 총상 부위에 출혈이 있는 점으로 미뤄 허 일병이 두번째와 세번째 총격을 받을 때까지 심장박동이 어느 정도 있었으며, 첫번째 총알을 맞은 뒤 7~8시간 동안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공개했다. 규명위는 "외국에서도 1발의 총상을 입고도 수 시간 동안 생존했던 사례가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누가 어떤 이유로 2발을 더 쏘았는지와 삼급부대의 어느 선까지 사건 조작에 개입했는지, 당초 7사단 현병대의 수사 결과가 상부의 조작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세영 오석영기자 sylee@kdaily.com 2면으로

## '의문사위 활동 연장' 法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과 민주당 김희선(金希宣) 의원 등 25명의 의원들은 오는 16일 조사시한이 끝나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철저한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의 조사시한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으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신청해 법원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 "허일병 타살" 결론

## 의문사위 최종결과 발표 추가 총격자는 확인못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4년 부대에서 총을 쏘 자살한 것으로 군이 발표했던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건에 대해 "허 일병은 타살됐으며 군에서 자살로 조작·은폐했다"는 최종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허 일병은 84년 4월 2일 강원 화천군 7사단 3중대 본부내에서 벌어진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하사관이 오발한 실탄 등 탄인에 의한 3발의 총격에 의해 숨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미법의학자 노용면 박사에게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결과, "허 일병이 첫 총격을 당한 뒤 7~8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아내고 2,3번째 총격이 확인

사실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위원회는 그러나 내무반에서 첫번째 총격이 가해진 후 폐유류고 근처로 허 일병을 옮기고 추가 총격을 가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과 인물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가 총격 두발의 성격 ▲추가 총격 당사자와 지시한 사람 ▲사건 은폐에 군 내부 어느 선까지 가담했는지 여부는 최근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한편 이준(李俊) 국방부 장관은 이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 “2·3彈 누가 쏘냐” 입증이 핵심열쇠

## 의문사위, 許일병 타살 결론 내렸지만...

‘자살한 사람이 스스로 3발을 쏘아 죽을 수 있을까?’

1984년 4월 2일 강원도 7사단에서 일어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은 이 의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처음 수사를 맡은 7사단 헌병대도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자살 결론을 내렸다. 이후에도 84~95년까지 육군범죄수사단 등이 5차례나 재조사를 벌였지만 결론은 동일했다.

2001년 1월 유족들의 진정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나

섰다. 의문사위 역시 이 ‘3발 자살’에 강한 의심을 가졌지만 마땅한 단서는 없었다. 그러던 중 사건 현장 외곽의 대대 상황병 등이 2일 새벽에 허 일병 자살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는 총성을 오전 10~11시에 들었다는 부대원들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당시 부대원 13명을 차례로 소환해 이 의문을 풀어가던 중, 지난 6월 전모 병장으로부터 ▲2일 새벽 중대본부에

서 이 부대 장모 중위의 진급 축하 연이 있었고 ▲축하연 당시 노모 중사가 중대장과 말싸움을 벌였으며 ▲허 일병이 이를 말리던 중 노 중사가 우발적으로 쏜 총에 한 발을 맞았다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다른 부대원들은 “진급축하연 자체를 몰랐다”거나 “축하연은 있었지만 총성은 못 들었다”고 진

### “우발적 총기사고로 사망” 진술확보 성과 부검결과와 부대원들 증언 서로 안맞아

술했다. 나머지 2발은 누가 쏜 것인지도 의문이었다.

의문사위는 여기서 군부대 차원의 자살 은폐·조작을 의심했다. 사건 당일 오전 “내무반에서 물청소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토대로 허 일병이 오전 2~4시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노 중사 총에 맞아 숨진 뒤 방치돼 있다가 오전 10~11시쯤 폐유류고 근처로 옮겨졌으며, 이곳에서 누군가가 2발을 더 쏘아 허 일병이 자살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증거를

부대원들은 서로 싸고 이를 속이고 있다는 게 의문사위의 판단이었다. 의문사위는 지난달 20일 이런 내용의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추론은 부검 결과와 충돌했다. 부검서에는 허 일병이 3발을 맞을 동안 살아있었다는 ‘생활(生活) 반응’을 기록하고 있었다. 때문에 ‘과연 첫 발을 맞고 7~8시간 생존해 있다 2·3발을 맞았다는 추론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나온다. 부대원들도 “불확실한 추측으로 우리를 타살 집단으로 몬다”고 반발했다.

의문사위는 10일 최종 발표에서 “내무반에서 허 일병에게 총격이 가해졌다”는 타살 증언 부분만 확실하다고 했을 뿐 은폐·조작 부분 등은 “시간이 없어 밝히지 못했다”고 후퇴했다.

발표 당일, 타살을 증언한 전 병장 측은 “부대원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나머지 부대원들은 “(없던 일을 말하는 것을 보니) 전 병장이 뭔가 발목잡힌 것 아니냐”고 하는 등 부대원 내부의 의견도 대립하고 있다.

/廉康洙기자 ksyoun@chosun.com  
/安容均기자 ksyoun@chosun.com

# 허 일병 사망규명 끝나지 않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8년 전 허원근 일병의 군부대 내 죽음의 자살 아닌 타살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끈질기게 제기돼온 그의 ‘의문사’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허 일병의 죽음은 타살 결론으로 의문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엔 진상에 대한 욕구와 의문들이 더 불어났다. 허 일병은 당시 술에 취한 하사관이 새벽에 내무반에 들어와 행패 부리다 쏜 총에 맞아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 자살로 조작하기 위해 2발의 총격이 추가로 가해진 끝에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문사위의 발표에 대해 허 일병을 쏜 사람으로 지목된 하사관은 “나하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현병 관계자들은 의문사위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의식 잃은 허 일병을 내무반에서 끌어내고, 아직

생존해 있을 수도 있는 허 일병에 2, 3탄을 쏘는 등 조직적인 은폐·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문사위는 정확한 경위와 관계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사건 현장인 내무반에 있었던 13명의 부대원 중 9명이 “허 일병은 자살하지 않고 타살됐을 수도 있지만, 내무반에서 하사관이 쏜 총에 죽었다거나, 부대내에 조직적인 은폐가 행해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모 언론에 밝힌 사실에 국민들은 헛갈리고 있다. 다른 부대원들은 “허 일병의 핏방울이 내 옷에 튀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허 일병의 죽음에는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의문점이 많은데, 의문사위는 16일로 조사시한이 끝난다. 다행히 정파를 떠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연명으로 시한연장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 통과로 허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완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 의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조선일보

“참고인 한 명은 실지조사 현장까지 갔다가 (조선일보로 인해) 두려움과 불쾌함을 느껴 도저히 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결국 돌아간 일도 있습니다.”

지난 84년 군에서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63)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허씨는 다른 방송·신문사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선일보 기자를 향해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의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연락, '허일병은 자살'이라는 기사를 썼는지 질문했다. 조선일보 기자는 “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됐다”며 끝을 흐린 뒤 조용히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허씨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중간 발표가 언론에 보도된 뒤 참고인들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 때문에 증언을 기피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의문사규명위의 최종 조사결과는 지난달 20일 중간발표보다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었다.

특히 허씨는 허일병 타살의 결정적 증언을 한 참고인이 실지조사에

참여하려고 하자 조선일보측에서 전화를 걸어 ‘꼭 가야만 하느냐’,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고 추궁했다고 말했다.

참고인은 두려움에 떨며 “의문사 규명위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증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허일병이 타살이라는 진술은 분명 사실이다”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다른 언론과는 달리 자살에 무게를 두고 보도하는 것이 자유일 수 있다. 하지만 취재과정이었다 하더라도 참고인이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낄 만큼 추궁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추악한 과거사를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보호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기득권에 편향된 언론의 모습은 약자들의 맺힌 한을 더욱 시리게 한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고개를 떨구고 쓸쓸히 일어서는 허씨의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은 한다”고 자처하는 이 신문의 광고문구가 떠올랐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 취재수첩



류정민

### 허원근 일병을 또 사살하려는가

<시사저널>은 살해 은폐·조작을 입증하는 헌병대의 자살 조작서, 특조단조사 보고서, 대대장 진술서를 입수해 공개한다. 이 자료는 일부 언론의 오보와 군 당국의 '반발성 재조사'가 허일병을 또 죽이는 것임을 보여준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문사위)가 8월20일 허원근 일병 타살과 은폐·조작 경위를 중간 발표하자 국방부는 즉각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결성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8월28일에는 1군 부사령관 정○○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조위 조직을 결성하고 민간 자문기구까지 포함한 합동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 사건 조사는 무려 다섯 번째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또다시 재조사를 천명하게 된 속을 들여다보면 그 기류는 후속 작업이러기보다는 반발에 가깝다. 사건이 발생한 1984년 4월부터 1999년까지 군 수사당국은 세 차례나 이 사건을 재수사했다. 매번 결론은 자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문사위가 그간의 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엎는 내용을 발표하자 국방부는 충격과 당혹에 휩싸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의문사위 결과를 수용하면 종초상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의문사위의 발표 이후 국방부 주변에서는 '일부 부대원이 의문사위 조사 결과와 다른 말을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같은 반발 기류는 특조위 결성 발표로 수그러드는 듯 보였다.



고 허원근 일병 아버지 허영춘씨와 유가족 회원들이 기무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의문사위 발표에 흠집 내려는 엉터리 보도들

그러나 공교롭게도 특조위 결성과 때맞추어 8월28일로부터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일부 부대원들의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의문사위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흠집을 내는 각종 보도가 뒤따랐다. 의문사위가 국내 법의학자들의 '자살' 소견을 감추었다든지, 황적준 교수를 중심으로 한 법의학회 회원 8명이 의문사위에 허일병 사건을 자살로 판정한 일치된 감정서를 보냈지만 외면했다는 따위 기사들이다. 그러나 <시사저널>이 추적한 결과 <조선일보>의 취재 과정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특히 '법의학 관련 자살' 감정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오보였음이 밝혀졌다.

우선 의문사위에서 진술한 일부 부대원들이 탄소리를 한다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부대원들에게 18년 동안 고통을 안겨준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위에서 타살 현장 목격담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던 한 부대원은 “신변을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는데 기자가 갑자기 전화해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데 왜 당신만 그런 진술을 했느냐’ ‘혹시 당신이 쓴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 불쾌하고 당황해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둘러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대원들도 은폐 공모자, 또는 제2·제3의 실탄을 발사한 공범 관계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처지이다.

사실 부대원 대부분은 지난 18년간 두려움 속에서 지내왔다. 막강한 군 권력이었던 보안대·헌병대, 부대 상급자들의 지시와 특별 교육, 모진 고문으로 인해 이들에게 허일병 사건은 악몽이었던 셈이다. 의문사위도 이들을 조사한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군 수사당국의 재조사는 사실상 의문사를 더욱 굳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성의 없는 수사와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된 군의 재조사 과정은 관련자들이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밝혔다.

의문사위측은 일부 부대원들이 의문사위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해 탄소리를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9월2일 제2차 진상조사 중간 발표를 통해 허원근 일병이 살해되던 생생한 현장 순간과 은폐·조작 전모를 공개했다(48~49쪽 기사 참조)

고려대 황적준 교수의 입을 빌려 국내 법의학자들이 허일병 사건을 자살로 결론지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위는 허일병 사건에 대해 대한법의학회에 감정을 의뢰한 일이 없었다. 황적준 교수는 이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 보도 뒤에 의문사위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고 허원근 일병 사건에 감정서를 보낸 일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법의학회가 처음 군의문사 관련자 부검 자료 40여 건을 대략 검토한 결과 부검 소견만으로 수사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건은 없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황교수는 허일병 사건에 대해서는 의문사위 감정소위원회에 자기가 직접 참여해 "이 사건은 법의학 감정으로는 해결할 사건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조선일보>가 황교수를 인용해 '대한법의학회 회원 8명이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자살이라는 일치된 결론을 얻어 감정서를 의문사위에 보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을 것이다'라는 요지로 보도한 데 대해 황교수는 "사실이 왜곡된 것이다. 기자들이 함부로 각색하는 바람에 무슨 말을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병대, 수사하기도 전에 자살로 보고

18년이 지난 허일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법의학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현병대가 만약 초동 수사 당시 부검 검사관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거기에 맞추어 달라고 요구했다면 그런 수사는 법 의학자를 배보로 만드는 행위나 다름없다. 허일병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1984년 4월 2일 사망한 허일병에 대한 부검은 4월4일 이루어졌다. 당시 현병대는 수사를 시작하기 전인 4월5일 주요 사건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이 문건의 제목은 '자살 중간보고'였다. 주요 내용은 시종 허일병을 '자살자'로 묘사하고, 종합 판단을 자살로 내렸으며, 부검 군의관의 감정이 나오는 대로 자살로 종결하겠다는 보고였다. 사실상 초동부터 자살로 단정하고, 부검 군의관을 통해 끝내버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취재진이 당시 부검 군의관을 수소문해 연락한 결과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허일병의 시신을 최초로 부검한 사람은 박 아무개 군의관(현재 건국대 법의학실 교수)이다. 공교롭게도 허일병 시체를 부검한 1984년 박군 의관은 육군현병감살로부터 현병감 표창을 받았다. 변사체 검사로 공로를 세웠다는 것이 수상 사유였다. 이에 대해 박교수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군 기관에서 상을 나눠먹기 비슷하게 군의관에게도 허나씩 주다가 내 차례가 온 것이지 허일병 부검 건으로 받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당시 부검의로서 허일병 사건을 처리한 데 대해 어떤 특별한 느낌이 없었느냐고 묻자 이렇게 회고했다.

"당시 군의관의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허일병 사건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정보는 현병대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검도 현병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부검의도 그렇지만 수사관은 직업에서 나오는 감이 있다. 이 사건도 바로 냄새가 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현병대가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수 있다. 세월이 흐르면 현병대는 영동한 데 책임을 떠넘기는 등 다른 소리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검시 제도의 한계 때문에 수사에서 의사는 권한도 없고, 수사관의 들러리를 서는 격이어서 대부분의 법의학자들이 포기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박군 의관이 작성한 허일병 관련 부검 소견서에는 '자살'이나 '타살'을 언급한 대목은 없었다. 그러나 현병대는 세 번째 총알이 관통한 머리 부위에도 생활반응이 있다는 소견서를 근거로 자살 결론을 내렸다. 양 가슴에 허일병이 스스로 M16 소총을 한발씩 쏘아보고 그래도 죽사하지 않으니까 다시 머리에 대고 스스로 세 번째 총알을 쏘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검 결과는 사실 타살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자살할 의지가 있었다면 심장이나 폐 등 치명적인 부위를 일부러 피해 총을 쏘았겠느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가 가슴을 향해 첫 발을 쏘았으나 빗나가 피해자가 의식만 잃은 채 숨이 붙어 있지 확인 사실 겸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다른 가슴과 머리에 밀착해 두 발을

타 쏘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얘기이다.

이와 관련해 의문사위는 총기 사고를 많이 다룬 해외 법의학자에게 지난해 이 사건 부검 기록 감정을 의뢰했다. 허일병 부검 기록 감정을 의뢰받은 저명한 한 재미 법의학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감정 소견을 보내왔다. '자살·타살 여부를 시체 사진이나 부검 기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것을 시도한다면 매우 경솔한 처사다. 시체 사진만 보고 하는 수사는 몹시 위험하다. 그렇게 하여 맺은 결론도 무의미한 것이다. 허일병 사건은 밀접 총창이다. 머리를 먼저 맞았다면 양 가슴은 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살하기 위해 가슴에 쏘는 사람은 심장 부위를 쏘다. 허일병의 경우 탄환이 심장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가슴에 두 발을 먼저 쏘 후 머리에 그런 총창을 만들기는 힘들다는 것이 종합 소견이다.'

### 특조단, 타살 정황 알면서도 외면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특조위를 꾸려 이 사건을 국내 민간 법의학자들에게 의지해 다시 '자살' 결론을 유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문사위 조사로 타살이 확정되고, 비록 공소 시효는 지났지만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특정되어 나오는 시점에서 국방부로서는 은폐·조작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정하게 뒤처리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초동 수사 때 부대에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조작했다는 증거는 현병대 1차 수사 때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문제는 부대 지휘 계통의 은폐·조작 지시 전모를 밝혀내고 범인을 잡아내야 할 수사기관이 초동에 영동한 화풀이를 했다는 사실이다. '자살 현장을 은폐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말도 안되는 혐의로 당시 중대장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이다. 사건 직후 수사 방해 혐의로 처벌받은 중대장 김 아무개 대위는 구속 당시 진술서와 조서를 통해 시종일관 '부대원들에게 사건 발생 시간대와 허일병 시신에 대한 은폐·조작을 지시한 것은 대대장과 보안부대 관계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대대장 등 허일병 소속 부대 상급 지휘자는 현병대로부터 별다른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 차례나 이 사건을 수사한 군 당국은 정말 허일병 타살 정황을 몰랐던 것일까. 적어도 1999년 특조단은 허일병 사건의 진상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감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중대장이 현장 은폐 지시자로 지목한 전 아무개 대대장(현역 육군 대령)은 1999년 국방부 특조단 조사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허일병이 중대장에게 사살되었으리라는 생각에 중대장 월북 사태를 막기 위해 그를 후방으로 전출시켰다'라고 진술했다. 취재진은 전대대장의 진술서와 국방부 특조단의 사건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다(왼쪽 위 사진 참조).

### 허일병 아버지 "특조위 재조사 거부한다"

이런 특조단 수사 흐름대로라면 중대장이 범인으로 특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허일병 사건이 1999년 말 의문사위 손으로 넘어가면서 사건의 진상은 '타살'이 되, 최초로 총을 발사한 범인과 사건을 은폐한 이들은 새로운 인물들이 드러났다. 3년 전 허일병 소속 부대 대대장과 국방부 특조단이 타살 용의자로 암시했던 중대장은 1999년에 사망했다. 결국 의문사위가 새로운 용의자의 존재와 은폐·조작 실상을 중간 발표함으로써 1999년 특조단조차 용의자들에게 능력당했거나 진상을 왜곡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18년간 불철주야 뛰어온 허일병의 아버지 허영춘씨는 최근 국방부가 다섯 번째 조사를 하겠다고 한 데 대해 "특조위 수사는 유족이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허씨는 이어 "의문사위가 최종 진상을 발표한 뒤에도 군내 은폐 세력과 내통해 계속 진실을 호도하는 부대원이 있으면 유가족 부모들이 짐으로 찾아가 농성을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실을 말하면 용서하겠지만 계속 은폐하려 든다면 국제법에 호소해서라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희상 기자 hschung@sisapress.com

살해 은폐·조작 증거 보여주마

의문사위, 허일병 사망 관련자들의 '구체적 증언' 발표

진실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9월2일, 허원근 일병이 부대원의 총탄에 쓰러진 순간부터 상관들이 자살로 은폐·조작해 가던 숨겨졌던 과정을 공개했다. 그 주요 내용을 발췌해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1. 과거 헌병대 수사 결과 요약

- 7사단 헌병대는 84. 4. 2. 14:00경 허원근 사건에 대해 소속 연대장으로부터 인지하여 수사한 결과
- 허원근은 84. 4. 2. 09:50경 중대본부 남방 약 30m 떨어진 폐유류고 울타리 옆에서 자신의 M16 소총을 반자동에 위치시키고 스스로 우측 가슴 부위에 한발을 발사하였으나 치명상을 입지 않자 다시 좌측 가슴 부위에 발사하였으나 역시 치명상을 입지 않자 마지막으로 우측 눈썹 부위에 한 발을 발사하여 자살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2. 위원회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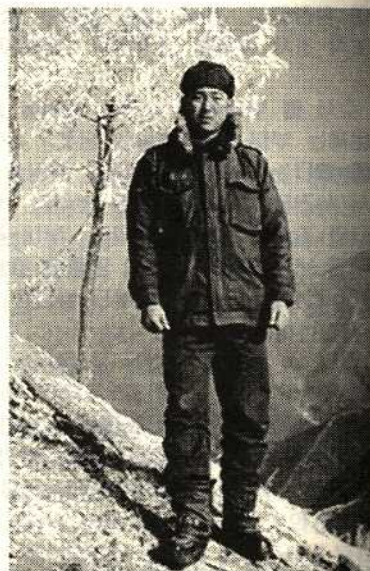
가. 육군 제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간부인 장교 2명과 하사관 1명은 1984. 4. 1. 늦은 저녁부터 술자리를 가졌으며, 술자리 도중 김○○과 노○○이 말다툼을 했다.

당시 헌병대 수사기록 및 참고인 노○○, 오○○, 이○○, 전○○, 이○○, 신○○, 우○○(당시 노○○ 전령)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84. 4. 1. 저녁(자정 전후로 추정됨)부터 2일 새벽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16소초장 장○○이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김○○, 장○○, 노○○은 중대본부 중대장실에서 진급 축하 술자리를 가졌는데, 김○○의 전령이었던 허원근이 안주를 준비하는 등 뒷바라지를 했다.

▶허원근은 술자리 도중 안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중대장실에서 중대장 김○○으로부터 질책과 함께 구타를 당했다.

▶이후 계속된 술자리 와중에 술에 취한 상태였던 선임하사 노○○이 중대장 김○○에게 철책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주점에서의 중대장의 접대부 취급을 지적한 것을 이유로 김○○과 노○○은 말다툼을 했으며 화가 난 노○○은 중대장실 문을 박차고 내무반으로 뛰쳐나왔다.



나. 1984. 4. 2. 새벽(02:00~04:00 사이로 추정)에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술 취한 노○○이 발사한 한 발의 총탄이 허원근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관통하였다.

■ 노○○의 행패

선임하사 노○○, 사병 오○○, 전○○, 이○○, 우○○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중대장실 문을 박차고 내무반으로 나온 노○○은 사병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책상 등을 걷어차고 허원근, 오○○, 손○○을 발로 걷어치는 등 사병들에게 화풀이를 하다가 손○○이 노○○을 말리자 노○○이 손○○을 밀어붙이고 나서는 실탄이 들어 있는 탄창이 삽탄되어 있었던(노○○은 19소초에서 중대본부로 이동할 때 철책인 관계로 실탄이 들어 있던 탄창을 삽탄한 채로 소총을 들고 이동했으며, 중대본부에서 탄창을 빼지 않았다) 자신의 M16 소총을 들었다.

■ 노○○에 의해 발사된 총에 허원근이 맞았는지 여부

▶참고인 이○○ 및 전○○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자신의 소총을 든 노○○이 중대장실 앞에 대기하고 있던 허원근을 개머리판으로 찍자 허원근이 팔을 들어 막았

으며 그러자 노○○이 총 쏘는 자세를 잡고서 죽었다고 고함을 쳤다.

②그 순간 총이 발사되었고 총에 오른쪽 가슴을 맞은 허원근은 쓰러졌으며, 오○○과 신○○이 쓰러진 허원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은 겁먹은 표정으로 한동안 총을 양손으로 잡고 팔을 내려뜨린 상태로 서 있었다.

\*19소초원 권○○, 정○○의 진술에 의하면 노○○은 사건 전에도 흥분한 상태에서 사병들 발 밑에 총을 발사해 그 파편이 사병 눈에 박혀 부상을 입힌 적도 있었다.

▶그러나, 노○○은 '당시 자신이 총을 들고 행정반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기억이 나지만 총을 발사했다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및 전○○을 제외한 사람들은 허원근이 총에 맞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참고인들의 서로 상반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근거들을 이유로 허원근은 1984. 4. 2. 새벽에 우측 가슴에 총을 맞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사건 당일 대대 상황실은 새벽(04:00~06:00 사이로 추정)에, 연대장은 07:00경에 허원근이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대대와 연대에서는 아침부터 허원근이 사망(자살)했다는 것을 알았다.

①대대 장교 송○○은 "당시 새벽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사병으로부터 '3중대에서 자살 사고가 났다'는 보고와 함께 전화기를 넘겨받아 중대장과 통화했는데, 중대장이 '중대장 전령이 중대본부 바깥에서 총기로 자살했다. 대대장에게 보고해달라'는 등의 말"을 했으며, "이후 자신은 대대장과 연대 상황실에 보고"했음을 진술했으며

②1대대 사병 최○○은 위 송○○의 진술과 부합되게 "새벽에 3중대로부터 중대장 전령이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③당시 3연대장 김○○은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1대대장으로부터 3중대장 전령이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고 사단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며

④3연대 장교 정○○, 김○○, 1대대 장교 황○○, 1대대 사병 이○○, 김○○, 배○○, 정○○, 강○○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대대와 연대에서는 아침부터 허원근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사건 당일 허원근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1대대장 전○○은 아침(06:00~07:00 사이로 추정)에 사건 현장인 3중대 본부로 와서 중대장과 속의 후 돌아갔다.

(3) 사건 당일 중대본부 바깥에서 근무하던 일부 사병들은 헌병대 수사기록에 적시된 시체 발견 시각 이전에 허원근의 사건 경위에 대해 중대본부원으로부터 듣고 사건 내용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

①당시 중대 인사계 박○○은 "사건 당일 오전에 20소초에서 (오소리 등의) 쓸개를 먹고 있었는데, 2방의 총성이 들렸다. 중대본부에 연락했더니 중대본부 사병이 '인사계님! 허원근이 다쳤습니다'라고 말하기에 곧바로 중대본부에 올라갔다. 중대본부에서 중대본부원으로부터 '새벽 술자리에서 ○○○이 술에 취해 내무반으로 나와 허원근에게 총을 쏘고 나서 다음날 대대장이 왔으며 그리고 나서 ○○○이 시체에 2발을 더 쏘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②14소초원 김○○은 "사건 당일 중대본부에 올라갔을 때 전○○이 말을 한 것 같은데, '누군가가 허원근에게 총을 겨누었는데 허원근이 총을 잡고 피하려고 하다가 총이 발사되어 허원근이 죽었고, 그리고 나서 자살로 은폐하려고 시체를 중대본부 내무반 밖으로 옮겨 ○○○이 2발을 더 쏘았으며 물청소를 했다'고 진술했다.

다. 허원근이 첫발을 맞은 후(04:00~06:00 사이로 추정) 중대장은 대대 상황실로 허원근이 자살했다고 보고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으며, 사건 소식을 접한 대대장 등이 아침(06:00~07:00 사이로 추정)에 중대본부로 온 이후 역시 사건 은폐가 계속되었다.

■ 대대장 등이 중대본부로 온 이후 사건 조작·은폐 지속

▶중대본부 요원 전○○ 및 이○○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대대장과 보안주재관 허○○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중대본부로 온 후 행정반을 둘러보았다. 당시 내무반에는 허원근이 출런 피가 이곳저곳에 여전히 있었다.

②대대장은 중대장실에서 김○○(과 노○○)을 혼내고 난 후 내무반으로 나와 '중대장 지시대로 잘 움직여라'는 등 몇 마디 하고는 나갔다.

③대대장이 나간 후 김○○은 허○○에게 사건을 수습하는 데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허○○이 승낙하자 김○○은 중대본부원들을 모아놓고 조작·은폐 지시를 내렸는데, 그때 허○○이 거들었다.

▶그러나, 참고인 노○○, 장○○, 오○○, 손○○, 이○○, 신○○, 안○○, 권○○은 위와 같은 전○○ 및 이○○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위 참고인들의 서로 상반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근거들을 이유로 참고인 전○○ 및 이○○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본다.

(1) 당시 1대대 장교 송○○은 3중대장의 보고를 대대장에게 전한 뒤 "대대장이 보고를 받고 나서 직접 3중대장에

게 전화를 하여 사건 파악을 한 것 같고 다시 전화를 하여 보안주재관 허○○과 현장을 갈 테니 차를 준비하리"고 하여 허○○를 깨워 대대장에게 보냈고, 그 뒤 "허○○이 상황실로 들어와 상황병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알려주어야지 왜 알려 주지 않았느냐'고 했던 것 같다. 이후 직접 나가서 3중대로 가는 대대장 차에 대대장과 허○○이 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2) 당시 1대대 사병 최○○은 "사건 당일 새벽에 3중대로부터 '허원근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대대장이 06:10~06:20 사이에 운전병을 대동하고 3중대를 다녀왔던 기억이 나며 그 운전병이 3중대를 다녀왔던 사실에 대하여 말을 한 적이 있다. 대대장이 출발하기 전에 허○○이 내무반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이곳저곳을 발로 걷어차고 다녔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3) 당시 1대대 사병 김○○은 "사건 당일 새벽에 시끄러운 312 전화기가 울려 대대장이 깨어 전화를 받고 있었으며 그 와중에 보안대 허○○이 대대장 방에 들어갔다가 어디론가 갔던 것 같다. 대대장이 1호차를 대기시키라고 하여 운전병을 불렀는데 아침밥도 먹지 않은 대대장이 어디론가 갔다. 이후 대대장은 09:00경 돌아온 것 같은데, 1호차 운전병으로부터 3중대에 갔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4) 당시 1대대 사병 배○○은 "사건 당일 06:00이 넘어서 대대장을 태우고 3중대에 갔다가 09:00-10:00 사이에 복귀했다. 3중대에서 사병으로부터 사병이 머리에 총을 한 방 쏘 자살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5) 당시 1대대 사병 정○○은 "당일 아침에 3중대에서 중대장 전령이 죽었다는 소식을 내무반에서 전해 들었으며,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허○○이 내무반에 와서 짐합시켜 놓고는 '3중대 일 터진 것 누가 보고 받았냐'는 등 하면서 화를 냈다. 그러다가 허○○은 '대대장이 출발한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간 것 같다"고 진술했다.

라. 대대장이 복귀한 이후 자살로 조작·은폐 행위가 계속되었으며 누군가가 10:00~11:00 사이에 중대본부 밖에서 허원근에게 두 발을 더 쏘았다.

■누군가가 10:00~11:00 사이에 중대본부 밖에서 허원근에게 두 발을 더 쏘았다.

▶참고인 전○○ 및 이○○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누군가가 10:00~11:00 사이에 중대본부 밖에서 허원근에게 총을 2발을 더 쏘았다(\* 이○○와 전○○은 내무반 안에 있어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 2발을 더 쏘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②누군가가 허원근에게 2발을 더 쏘 때 이○○, 전○○, 신○○은 내무반 안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신○○은 상황전화를 받고 있었으나 오○○, 손○○, 안○○, 권○○은 내무반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다.

▶그러나, 참고인 노○○, 오○○, 손○○, 안○○, 권○○은 위와 같은 전○○ 및 이○○의 진술 내용은 부인하였다.

▶조사 결과, 허원근이 새벽에 내무반에서 노○○에 의해 발사된 총에 의해 한 발을 맞았다는 것은 확인했으나, 누가 어떻게 2발을 발사했으며 누가 2발을 발사하는 것을 도와주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아래와 같은 근거들을 이유로 당일 10:00~11:00 사이에 2발이 발사되었다는 것은 확인했다.

(1) 7사단 헌병대가 사건 당일인 84. 4. 2. 작성한 인지보고(헌병대 기록 제 59쪽부터 제 66쪽까지)에는 16소초원 박○○ 등 5명으로부터 10:50경 총성이 2방 울렸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며 허원근의 시체 주위에 탄피 2개가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7사단 헌병대 김○○ 수사관이 84. 4. 2. 작성한 현장 약도에는 허원근의 시체 주위에 탄피 2발만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헌병대 기록 제 87쪽), 역시 7사단 헌병대 서○○ 수사관이 작성한 현장 약도에도 위 김○○이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탄피 2발만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헌병대 기록 제 353쪽).

(3) 참고인 전○○, 권○○, 성○○(당시 16소초원), 노○○(당시 7사단 감찰참모 사병), 팽○○(당시 헌병대 사병), 양○○(당시 헌병대 간부), 김○○(당시 헌병대 수사관), 서○○(당시 헌병대 수사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탄피 한 발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탄피 2발만이 있었다.

(4) 당시 부검의 박○○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4. 4. 부검을 할 때 헌병대 수사관들로부터 탄피가 2발 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3. 향후 조사 과제

- (1) 2, 3번째 총격을 누가 가했으며, 왜 두 발을 더 발사하였는지 여부를 규명.
- (2) 사건의 은폐·조작을 누가, 무슨 이유로 지시하였으며, 어느 선까지 개입되었는가를 조사하여 규명.
- (3)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수사와 그 이유를 규명.
- (4) 이후 군 재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정희상 기자 hschung@sisapress.com

한마당

兵士의 죽음

전쟁이 없다면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전쟁을 목적으로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군대는 없다. 전쟁은 예외없이 '평화를 위한 선택'이었으며, 지금도 이것은 유효하다. 여기에는 진행 중인 전쟁이야 말할 것 없고, 전쟁은 항상 일어난다는 전제가 함께 포함돼 있다.

평시의 병정을 여름철 고풍 같다고 했다. 평화시의 병사를 여름철 난로에 비유하기도 했다. 일찍 군대란 불필요한 집단처럼 비쳐지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해야 옳다.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바깥 세상과 똑같이 평화시의 병영에서도 갖가지 형태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우리 같은 징병제 국가에서 대다수 젊은이가 입대를 꺼리는 현상은 굳이 나무랄 일이 아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는 아마 그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일 것이다. 안전사고 예기다.

자식을 군에 보내고 부모들이 특히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군인은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아직도 한 해 평균 약 200명으로 적은 숫자가 아니다. 군 관계자들은 60만 병력에 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민간에 비해 몇 십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군복무중 사망은 그렇게 단순비교하

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민감하고 미묘한 사안이다.

이런 연유로 군역문사 유가족의 절규는 더 없이 처절하다. 하물며 사망사고가 은폐·조작된 경우였다.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사망 원인중 자살이 40%를 넘는 건 누구로부터도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더구나 자살이 타살로 바뀌는 경우까지 심심찮게 드러나는 마당이다.

군당국으로서의 되래 난감하고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직된 부대운영 시스템이 자초한 것과 다름없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철통 같은 보안이 생명이나만큼 폐쇄적 운영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비밀주의의 구별해야 한다.

장군의 공명(功名)은 수많은 병사의 죽음 위에서 가능한 법이다. 딱히 들어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타살 뒤 은폐·조작'으로 결론 내린 허원근 일병 사망사고도 유사한 사례라 할 만하다. 헌병대의 군검찰까지 포함해 전 장병이 사단장을 정점으로 뭉치는 것은 박수를 보낼 일이다. 그렇지만 허 일병 사망사건에서 처럼 이것은 자칫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이준 국방부장관은 최근 "진실을 캐내야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며 허일병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지당한 말이다. 다만 의문사는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사라질 것이다.

한석동 논설위원 hans@kmb.co.kr

국방부 '허일병 관련자' 사전조사

대대장등 말맞추기 의혹

자살조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실제 활동 내용과는 다르게 쓰여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방업무보고서에서 의문사규명

위의 조사가 마무리된 지난 9일부터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했다고 밝혔으나, 사건 당시 대대장이었던 전모 대령의 부인은 기자회견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월 전 대령이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불려가 사전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전 대령 외에도 현역 군인으로 근무하

고 있는 사건 관련자 10여명을 9월 초 소환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특히 전 대령이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소환된 시점은 의문사규명위가 전 대령을 조사한 지난 5월 보다 사흘 앞선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의문사규명위에서 소환할 증인자들을 불러 이같이 사전조사를 벌인다면, 증인들이 입을 맞추는 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오석영기자 palbeti@kdaily.com

대한항공이 197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항공운항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항공이 1970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 100대 중 90% 이상을 최신형 제트기종으로 교체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은 197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항공운항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항공이 1970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 100대 중 90% 이상을 최신형 제트기종으로 교체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은 197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항공운항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항공이 1970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 100대 중 90% 이상을 최신형 제트기종으로 교체한 결과로 분석된다.

197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항공이 197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항공운항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항공이 1970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 100대 중 90% 이상을 최신형 제트기종으로 교체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은 197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항공운항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항공이 1970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 100대 중 90% 이상을 최신형 제트기종으로 교체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은 197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항공운항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항공이 1970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 100대 중 90% 이상을 최신형 제트기종으로 교체한 결과로 분석된다.

# 녹화사업 사건 관련 보도

### "녹화사업 피해자들, 진실을 말하라"

의문사위원회, 집단간담회 계획... '5공 핵심' 조사도 검토

손병관 기자 redguard@ohmynews.com

80년대 보안사의 강압과 가혹행위 속에 동료들에 대한 배반을 강요당했던 250여 명의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들, 의문의 죽음을 뒤로 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이 '살인적인 정훈교육'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www.truthfinder.go.kr, 이하 의문사위원회)가 11일 "7월중 5차례에 걸쳐 당시 피해자들의 집단 간담회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문사위원회는 또한 8월 하순경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5공권력 핵심부에 대한 조사 방침도 시사했으나 시일이 촉박하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 82-83년 '녹화사업' 기간 중 군대에서 의문사한 6명의 대학생들. 왼쪽 상단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두환(고려대), 이윤성(성균관대), 최은순(포국대), 한희철(서울대), 정성희(연세대), 한영환(한양대). © 유가현 홈페이지

의문사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규모는 군 당국의 공식 통계로만 447명(81.11~83.11)에 달하고, 이밖에 문무대 소요 연루 고려대생 109명(81년 11월)과 무림/학림 사건 관련자들까지 망라된다.

의문사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집단간담회를 열어 녹화사업(82.9~84.11) 대상자 256명중 200여명의 증언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덕형 제2상임위원은 "녹화사업 관련 사망자가 6명이나 되는데, 개별사건 조사로는 녹화사업의 운용 시스템 등 전체 윤곽에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다. 녹화사업 피해자들의 증언 청취 등 지금과 다른 조사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녹화(綠化)사업이란?

1980년 광주민중들의 민주화 운동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광주학살'의 진상을 접한 대학생들의 반독재 투쟁에

의문사위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보안사 사령부 및 예하 부대 관계자 100명 이상을 조사했는데, 대부분은 "장경 학생들을 설득과 토론회로 순화시켜 활기찬 군 생활로 이끌었다"며 오

''녹화사업' 관련 5공 핵심 출석요구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1980년대 초 신군부의 주도로 운동권 학생들의 사상 개조와 프락치 활용을 위해 입안.시행된 '녹화사업'과 관련, 실제 규명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5공 핵심인사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의 경우, 당시 보안사령부의 조직적 개입과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어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녹화사업이 권력 핵심자의 지시에 의해 입안, 진행된만큼 이달말께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 5공 핵심인사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문사특별법에 따르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규명위는 이와함께 이달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집단 간담회를 개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을 벌어나갈 방침이다.

south@yna.co.kr (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녹화사업 전면조사"

5공 때 운동권 강제징집... "전두환씨도 대상"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1980년대 초반 군에서 실시된 '녹화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를 선언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라고 11일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80년대 초반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 6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동권 대학생 사상전환 교육인 녹화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순전 대통령 등 5공 권력핵심부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불응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명위 관계자는 이날 "군 당국은 '81년부터 83년까지 학생운동과 관련, 강제 입영한 대학생은 모두 4백47명이며 이중 2백56명에 대해 토론 위주의 사상전환 프로그램인 녹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교육 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으며 그 의도도 운동권 학생들을 프락치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명위의 출석조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남궁욱 기자

의문사조사 전두환씨 소환키로 대학생 '녹화사업' 사망자 진상규명 차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해 숨진 서울대 휴학생 한희철씨 등 6명의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문덕형 상임위원은 "녹화사업 진상을 밝히려 이 사업 정책입안과 운용시스템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사대상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황인성 사무국장도 "전두환씨를 7월말까지 소환할 예정"이라며 "이는 진상규명위 입법 취지와 진상규명위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녹화사업은 5공 초기 3년동안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등에서 자행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강제징집과 프락치 활용, 반정권·민주화운동

관련자 체포공작으로 지난 1988년 5공청문회 때 군 당국은 447명이 징집됐고 256명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황국장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녹화사업에 동원된 100여명 피해자들의 집단 간담회를 비롯해 전두환씨 소환, 보안사 실지조사 등을 통해 5공 군사정권의 불법·폭력적인 인권유린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 증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황국장은 또 "이번 조사에서 또다른 녹화사업 의문사가 발견되면 직권사건으로 다루겠다"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마련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배장수기자

의문사조 “전두환씨 소환”

“녹화사업관련 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1일 80년대 초반 신군부에 의해 진행된 운동권 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녹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규명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이달 말쯤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규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녹화사업은 당시 보안사령부와 문교부, 대학 당국이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권력의 최고위층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2면으로

전두환씨 출석 요구키로

1면에서

규명위 문덕형 상임위원은 “의문사 조사 시한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6건은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7~8월에 녹화사업 의문사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를 위해 녹화사업 피해자 100여명을 상대로 출신 사단별 집단 간담회를 개최해 당시 상황을 진술받을 방침이다. 또 간담회 내용을 녹화, 녹취해 역사적 자료로 남길 예정이다.

규명위 관계자는 “당시 정훈교육을 담당한 심사장교들조차 진실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도덕적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집단 간담회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씨등 5공 핵심 소환”

의문사조 녹화사업 규명위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1일 1980년대 초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대학생들 강제 징집,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특별정훈교육)’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전두환(全斗煥)씨 등 5공 핵심인사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녹화사업 관련자료가 보존되어 있다는 단서를 확보했는데도 기무사 등이 자료를 폐기했다고 발뺌,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당시 보안사 경찰 안기부 문교부 등이 함께 개입했

던 정책 입안 및 집행 시스템을 밝히기 위해 5공 인사들의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특히 “당시 청와대가 간담회 도중 보안사령부에 직접 녹화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씨를 직접 소환할 방침임을 밝혔다.

규명위는 이와 함께 “실제 녹화사업으로 징집된 사람은 군 당국이 발표한 447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녹화사업 피해자 100여명을 불러 정확한 증언을 청취하고 가능하면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全斗煥씨등 출석요구 방침

의문사조, 녹화사업 관련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1일, 80년대 초 체제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실시된 군(軍)의 ‘녹화사업’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을 포함해 5공 핵심 인사들에 대해 이달 말쯤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며, 이마저 거부하는 조사대상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鄭佑相기자 imagine@chosun.com



# “특소 삼청거리 김씨들쿠스”

## ‘녹화사업’을 용서할 수 있는가

프락치까지 강요한 가장 비열한 국가범죄... 진실 밝힐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벽에 부딪혀

정성희, 한희철, 이윤성, 김두황, 한영현, 최은순...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들은 전두환 일당이 군사반란과 광주학살을 통해 집권한 이후 자행한 이른바 녹화사업에서 희생된 젊은 넋들이다. 그들이 목숨을 잃은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우리는 아직도 녹화사업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의 소위 수많은 ‘업적’(?) 가운데 필자같이 박정희를 형편없는 대통령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게 녹화사업이다. 박정희가 발거벗은 산을 녹화하려 했다면, 전두환 일당은 ‘붉게 물든’ 대학생들의 머릿속을 ‘녹화’하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다. 그것도 강제징집이라는, 국방의 의무를 정권안보에 이용하는 악랄한 발상을 통해서.

### 개인적인 ‘습술한’ 기억

녹화사업이란 전두환의 집권 초기에 강제징집된 학생운동 출신 대학생들을 ‘특별정훈교육’으로 순화한다는 명목으로 보안사가 마련한 계획이다. 이 사업에 따라 강제징집된 사병들에 대한 강압적인 사상개조와 학생운동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연행과 수사가 자행됐고,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안사가 녹화사업 대상자들에 대해 관제 프락치 공작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즉 이들에게 휴가를 쬐서 내보내 과거에 함께 활동한 동료·선배들의 행적과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너 하나쯤 죽어도 안전사고로 보고하면 그만이다”라는 험박 속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며 녹화사업 대상이 된 사병들의 인간성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녹화사업에 대하여 ‘습술한’ 기억을 갖고 있는 필자는 ‘객관적’으로 서술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필자 자신이 녹화사업의 1기 대상자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굳이 ‘습술한’이란 말을 쓴 까닭은 너무나 운 좋게 필자는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고, 프락치 공작도 강요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녹화사업 대상자라는 같은 운명에 놓였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끝내 살해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그분들께 늘 마음의 빗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의 군사반란 이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의문사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다. 이들 의문사 사건의 대부분은 국가기관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건들인데, 피해자 신문을 보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85건 가운데 군인이 25건으로 가장 많다. 그 중 공식적인 녹화사업 관련자가 모두 6명이다.

1980년대 초반의 녹화사업은 군이 국방의 의무를 처벌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나아가 프락치 공작을 강요하였다는 점은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역사사회학의 세계적인 대가인 찰스 티리는 국가의 성립 자체를 조직범죄로 보고 국가의 행동양식을 조직범죄와 견주기도 했지만, 녹화사업은 그런 국가폭력이나 국가범죄 가운데서 가장 비열하고 치사한 것이었다. 녹화사업과 강제징집은 단순히 보안사만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문교부, 병무청, 국방부, 육·해군본부, 검찰 등 정부의 여러 부서가 간여한 종합적인 범죄행위였다.

### 박정희 정권 때는 그래도 순진했다

아들이, 동생이 감옥에 가는 대신 군에 간 것을 다행이라고 여긴, 등록금까지 주지 않고 억지로 군대에 보냈다가 사망통지서를 받은 부모와 형제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비열한 행위가 녹화사업이었다. “군대에 가면 운동권에서 멀어지겠지 하는 생각에 보냈는데, 그게 동생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 이제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라고 김두황씨의 형 김두원씨는 말한다. 가족이 사진을 치워버리자 그 아들 얼굴만 그림으로 그리던 어머니는 곧 아들의 뒤를 따랐다.

우리나라에서 강제징집을,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이용한 것은 1971년 10월의 교련반대 데모사건이 아니었다 싶다. 박정희 정권은 학원의 군사화에 반발하는 대학생들을 경찰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자 위수령을 발동하여 대학을 군항부로 짓밟고, 전국 각 대학에서 학생운동 핵심인물 170여명을 제적하여 군대로 보내버렸다. 그런데 이들이 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 전국의 대학생들끼리 자연히 연결되었고, 그때 맺은 인간관계가 74년 민청학련을 조직할 때 요긴한 밑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박정희 시절의 강제징집은 좀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녹화사업처럼 학생운동 출신 사병들을 프락치 공작에 이용하려는 비열한 시도는 없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전국의 각 대학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 학칙을 개정하여 지도휴학제를 도입했다. 휴학이란 원래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학교당국- 실제로는 공안당국-이 학생들을 강제로 휴학시켜 군에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지도휴학 대상이 되어 일부는 군에 끌려가고, 일부는 반유신대모를 주도하여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하기도 했다. ‘문제학생’을 강제징집하여 군에 보내는 발상은 뒤의 녹화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당시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보안사와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전두환이 집권한 80년 당시 학생운동 주역들 가운데 검거되었다가 석방되거나 6개월 정도의 단기형을 살고 출옥한 사람들은 군대로 보내졌다. 전두환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그해 12월에는 서울대에서 학회들의 연락모임이 적발되어 이른바 ‘무림’사건이 일어났고, 이듬해 초에는 부산대에서 ‘부림’사건, 그리고 전국민주학생연합을 결성하려던 시도가 적발되어 ‘학림’사건이란 이름이 붙었다. ‘무림’이니 ‘부림’이니 ‘학림’이니 하는 이름은 관련학생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이름 붙인 것인데, 어떤 증언에 따르면 동백림 사건의 ‘림’자를 따서 돌림자로 삼았다고 한다.

### 6대 독자와 소아마비 장애인까지 입영

이 사건 관련자들은 대체로 A, B, C 세 등급으로 나뉘어 A급은 감옥으로 가고, B급과 C급은 군대에 강제입영되었다. 그리고 81년 12월5일, 정부는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를 통해

학생운동과 관련된 학생들을 조기입영시키기로 했다. 조직사건이 아니라도 단순시위에서 검거된 학생들도 강제입영되기 시작했다. 대학생이 휴학해 학적 변동자가 되어 빠르면 1개월, 늦으면 6개월 이상이 지나야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특수학적 변동자'들은 집에서 밥 한 끼 먹을 틈도 없이 수사기관에서 군대로 직행했다.

이때 강제입영된 사람들 가운데는 군대에 갈 만한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다. 필자처럼 신체검사를 받고 군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는 안경을 벗으면 기어다닐 정도로 눈이 나빠 이미 신체검사서에서 면제를 받은 선배도 있었고, 습관성 탈골로 면제대상이 분명한 사람도 있었다. 어떤 증언에 따르면 심지어 6대 독자나 소아마비 장애인까지 군에 끌고갔다고 한다. 이운성씨는 만 20살이 안 돼 징집연령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60고령인 2대 독자로 시력도 극도로 나빴는데도 군에 강제징집되어 결국 녹화사업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율복을 기도하여 보안대에서 조사받았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쓴 채.

녹화사업은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강제징집된 학생들이 제대할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시작되었다. 81년 1월에 입대한 무림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교원교육으로 인해 병역 단축 6개월을 받은 사람들은 83년 3월 말께 제대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두환 일당은 국방의 의무를 악용해 '문제학생'들을 학원에서 분리했지만, 학원시위는 가라앉지 않았고, 이제 강제징집된 학생들이 줄줄이 학원으로 돌아가게 되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에 보안사는 82년 9월 사령부 대공처에 중령 서의남을 책임자로 하는 5과(심사과)를 신설하고, 그들의 용어로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예방대책'을 세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 전두환이 깊이 개입했다는 점이다.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최경조의 증언에 따르면, 보안사 간부들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운동권 출신 입대자들이 불온낙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전두환이 "야, 최경조, 너 인마 뭐하는 거야"라고 질책하여 특별정훈교육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보안사의 특성상, 그리고 보안사령관 출신인 전두환과 보안사의 특수한 관계를 놓고 볼 때 당시 전두환의 이런 발언은 '명백한 지시'였다.

80년 이후 군에 강제징집된 학생들의 수는 약 1100명으로 추산된다. 군이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 않아 실상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81년 11월부터 83년 11월 사이의 입대자 447명 가운데 82년 9월부터 녹화사업이 외형상 중단되는 84년 11월까지 모두 256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 통계는 축소된 것으로 무림사건 관련자 등 81년 11월 이전에 입대한 사람들은 빠져 있다.

새까만 풀따구에 '부탁'했다?

88년 12월 5공청문회에서 당시 보안사령관 박준병은 프락치 공작을 일부 시인했다. 그런데 그는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일부 관계자들이 사병들에게 '부탁'한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탁'이라니! 군대에 '부탁'이라는 게 있을까? 더구나 서슬푸른 보안대의 수사관들이 새까만 풀따구에 '부탁'을 하겠는가? 83년 5월에 이운성, 6월에 김두황, 7월에 한영현, 8월에 최은순이 연달아 목숨을 잃었다. 이들이 겨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목숨을 끊거나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친구를 팔리는 프락치 공작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병들을 공작정치 도구로, 아니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면 보안사 요원들의 비열한 인간성 파괴행위였다. 일부는 친구들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다 아는 정보를 물어다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좋은 휴가기간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두문불출하다가 귀대하기도 했고,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사실이나 이름을 대주는 평생을 괴로워해야 했다. 녹화사업은 단순한 정훈교육이 아니었다. 몇몇 비전향 장기수들은 과거 박정희 시대의 강제 전향공작에서도 단순히 전향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전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한다. 동지를 팔아야만, 그래서 다시는 과거의 동지들과 만날 수 없게 되어야만 전향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전두환의 보안사는 '순화'의 기준을 단지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반인륜적인 수준에서 강요했다. 그리고 일부 보안사 요원들은 학생들을 이용하여 출세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프락치 공작을 강요했다. 당시 보안사는 공작예산의 절반가량을 이 사업에 쏟아부을 정도로 녹화사업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홍홍한 소문으로 떠돌던 프락치 공작과 학우들의 사망소식에 관한 학원교당은 84년 3월에 제적생과 해직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84년 9월에 '소요 관련 대학생 조기입영제'를 폐지했고, 이어 녹화사업의 전담부서인 보안서 3처5과도 폐쇄했다. 그러나 녹화사업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았다. 90년의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에서 보듯이 학생운동 관련자들을 이용한 프락치 공작과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은 계속되었다. 전 국민이 입대예정자, 군복무자, 전역자이거나 그 가족인 이 땅에서, 누구도 보안사의 촉수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군사정권 시기에 일어난 의문사를 파헤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다. 이 기관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아들딸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들이 421일이라는 오랜 기간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해 겨우 얻어낸 것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출발도 힘들었지만, 그 권한은 너무나 미약했다. 의문사 사건은 모두 군·보안사·안기부·경찰·검찰·교도소 등 힘 있는 기관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들 기관을 상대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 기껏해야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 뿐인데, 그나마 과태료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지에 관한 절차도 확실치 않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기에 의문사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관련자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면 몇달씩 묵히다가 주민등록번호, 당시 주소·본적 등을 한 가지씩 알려주는 식이다. 자료를 요구하면 폐기하였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문건명을 적시하라고 한다. 도대체 밑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정보기관의 문건명을 진상규명위원회가 어떻게 적시할 수 있던 말인가?

전두환 자녀들과 비슷한 연배인 희생자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경우 가해자들로부터 참혹한 사건들의 문헌 진실을 끌어낼 수 있었던 유력한 도구는 사면권이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 자신이 가해자였던 사건까지 포함하여-을 말해주는 대가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진술인이 기소되지 않도록 불처벌을 약속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생해 진실을 사들이는 이 방식을 놓고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2001년 4월 한국을 방문한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란데라 박사는 처벌을 통한 정의 구현을 바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진실고백을 한 사람을 사면한다는 조항이 헌법재판소에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남아공의 악명높던 '아파트헤이트'라는 인종분리정책의 앞잡이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문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불태우거

나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 속에 처넣었는지를 들어야 했던 가족들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러나 남아공은 처벌에 앞서 진실을 택했고, 진실에 근거한 화해를 추구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의문사의 가해자로서 응습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공소시효의 완성이란 면죄부를 손에 쥐고 있다.

녹화사업은 단지 의문사 6건의 개별적인 사건 모음이 아니다. 이는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진 지시에 의해 관련기관이 총동원되어 자행된 체계적인 국가범죄다. 한 없는 민주당과 과거 국가범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득시글거리는 한나라당은 여론에 떠밀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민사회 내에서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대부분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운동을 밖에서 지원할 시민사회의 일꾼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녹화사업으로 의문사한 정성희씨는 일기에서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할 때 국민은 무기력해진다고 언론을 질타했다. 그 언론들은 의문사를 외면한 것처럼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도 외면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해온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제 녹화사업의 최고책임자 전두환의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녹화사업의 희생자들은 전두환의 자식들과 비슷한 연배다. 무능한 대통령과 여당, 무책임하고 변변한 야당, 그리고 무관심한 시민사회의 합작으로 어쩌면 저 녹화사업을 비롯한 의문사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살아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홍구 | 성공회대 교수·한국현대사

### “녹화사업 통수권자 요청”

의문사위 “보안사장교 진술”  
서울 중심가 분실 운영도

지난 1980년대 초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운동권 학생들의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위해 보안사가 서울시내 중심가 등에 별도의 분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80년대에 벌어졌던 운동권학생 강제징집과 군내부 녹화사업 피해자 3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82년 보안사가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위해 보안사 3층 안에 5과(심사과)를 신설하는 한편, 과천분실(과천시 주공아파트 1단지 안)과 진양분실(서울 중구 퇴계로 진양상가 아파트 안)을 운영했고, 강제징집자들에 대한 사상개조 공작과 프락치 공작이 이 분실을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이번 조사에서 80년대 녹화사업과 강제징집에 당시 문교부 정책심의실, 각 대학 학생처 관계자, 병무청 징모관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었으며, 또 일부 보안사 장교들이 “녹화사업은 통수권자의 요청이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훈 기자

# “녹화사업은 학생운동 탄압공작”

### 입대지원서·신체검사 없이 강제징집되기도 의문사규명위, 7일 국정원 실지조사 예정

지난 80년대 특별정훈교육이란 이름으로 학생운동권들을 강제입영시켰던 ‘녹화사업’은 군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강압적인 학생운동 탄압공작이라는 주장이 정부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3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집단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3년 강제징집된 양모씨는 같은해 10월께 안기부 과천본실, 진양본실에서

각각 10일, 20일 동안 학생운동권의 조직 파악을 위한 조사를 받았다.

82년 강제징집된 변모씨는 녹화사업을 다녀온 후 자대로 복귀, 중대원들 앞에서 정훈교육을 실시하고 해당부대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상부에 보고했다.

육군 모사단에서는 강제징집자를 대북심리전 면접병으로 활용하고 대북방송 원고작성에 동원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강제징집자들은 군복무 중 휴가를 이용, 학생운동의 동향과와 을 요구받는 등 프락치 활동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요된 상황에서 입대지원서(동역서)를 작성했으며 일부는 입대지원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신체검사 등 절차마저 무시된 채 강제징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문사규명위는 녹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강제징집 시스템은 이미 계엄시절에 준비됐으며 지시는 통수권자가 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의문사규명위는 당시 합동수사본부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씨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문공위원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당시 녹화사업 담당과인 보안사 3차5과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녹화사업은 특별정훈교육이라기 보다는 강압적인 학생운동 탄압공작이라는 것이 의문사규명위의 판단”이라며 “피해자들은 극도의 불안감,

공포감을 겪었으며 제대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문사규명위는 녹화사업 피해자와 장준하, 이철규, 이태창 사건 등 의문사 12건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문서실 확인불가’, ‘별도자료 없음’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던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오는 7일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의문사규명위는 이날 국가정보원 자료보존실로 관계자 10명을 파견, 컴퓨터 검색을 통해 의문사 관련자료 유무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사의 방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 전두환씨 ‘녹화사업’ 조사

### 의문사규명위, 상당부분 관련 확인 출석통보

#### 노태우씨도 내주 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8일 5공시절 강제징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락치활동 등을 강요했던 소위 ‘녹화사업’과 관련,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를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수송동 진상규명위 사무실에서 갖기로 하고 이를 전전대통령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전전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에 이어 다음 주 중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전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그가 당시 국가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이뤄지는 의례적인 조사가 아니다”며 “녹화사업 조사과정에서 전전대통령의 역할이 상당부분 드러나 소환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신군부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당시 보안사 안기부 문교부 경찰청외대 5개기관이 공조해 실행에 옮겨졌다”면서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이들 기관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전전대통령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7일 진상규명위에서 조사를 받은 전 보안사령관 출신 인사로부터 ‘녹화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두환씨가 져야 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최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보안사 간부가 청와대 만찬에서 운동권 출신 입대자들의 관리 부실을 전전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자 녹화사업을 강도높게 준비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위는 전전대통령이 출석하면 1982년 9월부터 1984년 11월 사이 보안사에서 특별정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대학생들을 강제징집, 사상개조 및 프락치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지난 6일 전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전전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6일에는 오자복 당시 국보위 문공위원장, 7일에는 허문도씨를 불러 조사했다. 하윤해기자

# 운동권 학생 녹화사업 '그늘' 밝혀질까

## 의문사 규명위 조사 성과 전망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함에 따라 녹화사업의 진모 등이 밝혀질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조사에서 정책입안과 운영시스템 등 녹화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최대한 상세히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 전직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소환 등의 권한이 없어 '출석요구'라는 기록만을 남긴 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당시 권력의 핵심기관인 보안사(현 기무사)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경찰 및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전전대통령령뿐이었다"며 "이때문에 전전대통령을 파견 중인 자격으로 불러 당시 녹화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녹화사업에 대한 조사는 사망자는 물론 당시 인간성 파괴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신군부의 정권창출 과정과도 연계

## 全·盧전대통령 출석 관심

## 거부땀 유야무야 가능성

된 만큼 과거청산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 및 향후 전망=진상규명위는 녹화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들 통해 군복무 중 출신대학에서 강제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은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 당사자들로부터는 '실제로 프락치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얻어내기도 했다. 특히 프락치 활동을 목적으로 했던 진양분실에서는 정감이 사이에 나무 몽둥이를 끼고 밟는 등의 가혹행위와 구타가 일어났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녹화사업 대상자에는 징집연령보다 어리거나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대 불가 판정을 받았던 학생들, 심지어 교도소 복역을 통해 군면제를 받았던 학생들도 포함돼 있었다.

녹화사업은 여러 부처간의 공조와 연계로 진행된 만큼 이들 기관의 명령체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전

망이다. 하지만 9월16일로 한정돼 있는 조사 시한과 진상규명위의 권한을 고려한다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한행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관련자들이 출석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외에는 처벌할 수단이 없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과거정 국가기관의 자료 미제출, 실지조사 거부,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에 대해 강제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위원회의 한계"라며 "이를 극복할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녹화사업이란=1982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보안사가 중심이 돼 강제징집된 학생운동 가담자들의 사상을 억지로 개조하고 프락치활동을 강요한 정책을 가리킨다. 이 기간에 무려 600여명의 학생들이 특수화적 변동자가 돼 강제 징집됐다.

1980년 초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강제징집 조처를 통해 운동권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분리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학생들이 다수 입대하자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피했으며 녹화사업은 이들 강제 징집자의 제대가 가까워지는 82년 가을부터 본격화됐다.

하윤해기자 justice@kmib.co.kr

# 전前대통령 내일 출석 통보

## 의문사위 '녹화사업' 관련조사

## 현직검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88년 사업주의 친인척 비리에 항의하다 구사대에 맞아 사망한 문용섭씨 사건과 관련, 당시 사건 담당검사로서 규명위의 소환에 불응해온 명동성(明東星) 인천지검 1차장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규명위는 "명 검사가 당시 회사측의 교사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입건하지 않았는지, 다른 공안기관과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명 검사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규명위의 활동에 최대한 협조했다."면서 "현직 검사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규명위는 이날 지난 75년 의문사한 장준하씨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위해분자'로 분류됐으며, 프락치를 통해 밀착감시를 당했다는 사실이 당시 중정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또 당시 장씨를 담당했던 중정 6국5과의 박모 계장이 75년 3월31일 작성한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라는 보고서에서 장씨를 '현 정책을 비방하고 반체제 활동을 조장하는 인물'로 묘사하며 범법자료를 모아 처벌하겠다고 보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명위는 5공화국 시절 강제징집 대학생에게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한 '녹화사업'과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10일 오전 9시30분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지난 6일 보냈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이세영기자 '입사' 관련  
보통 '출석' 일일 '출사' 관련

### 현직검사에 동행명령장 의문사추, 문용섭씨 사망관련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문용섭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 검사인 명동성 검사(현 인천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문용섭사건은 문씨가 1988년 6월 서울 광무택시에 근무하던 중 회사 비리에 대해 항의하다 구사대인 신모씨에게 맞아 숨진 사건으로, 신씨는 당시 단순폭행치사죄로 구속돼 복역했으나 최근 의문사위 조사에서 "회사측의 교사로 문씨를 폭행했다"고 양심선언했다. /김희균기자 belle@sgt.co.kr

## 의문사추, 전두환씨 조사

### 5공시절 녹화사업관련 출석요구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8일 5공 시절 강제징집 대학생에게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한 '녹화사업'과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10일 오전 9시30분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지난 6일 보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이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문준식기자 mjsik@sgt.co.kr

## '녹화사업' 전두환씨에 의문사추 "내일 출석" 통보

### 내주 노태우씨도 조사키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공 시절 강제징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락치활동 등을 강요했던 이른바 '녹

화사업'과 관련, 6일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에게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수송동 위원회 사무실에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그러나 전 전대통령이 아

직 출석 여부를 밝혀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에 이어 다음 주 중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6일 오자복(吳滋福) 당시 국보위 문공위 상임위원장, 7일에는 허문도(許文道)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 "녹화사업 적법진행" 전 前대통령 출석거부 의문사추, 동행명령 검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녹화사업 관련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거부 의사를 전해왔다고 9일 밝혔다.

(본보 9일자 1면 보도)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전전대통령의 고문변호사 이양우씨가 이날 위원회로 전화해와 "녹화사업은 적법한 국가시책으로 진행된 일이었으며 진상규명위가 조사하는 6명의 사망사건에 대해 전전대통령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따라서 출석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위는 다음주 초 전전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재차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하윤해기자

### 의문사추 소환에 전두환씨 불응의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9일 전두환(全斗煥)씨가 10일 오전 위원회 사무실에 출석하라는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전씨가 이날 오후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2차 소환장 발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향후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1980년대 초반 강제 징집된 운동권 학생에게 프락치활동을 강요했던 '녹화사업'의 입안 및 집행을 전씨가 지휘했다는 단서를 잡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6일 전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 전두환 전 대통령 '녹화사업' 조사 불응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1일 1980년대 초반에 이뤄진 '녹화사업' 관련 조사를 위해 소환을 통보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씨의 위임을 받은 이양우 변호사는 위원회에 보낸 출석요구 답변서에서 "제5공화국 당시 시행된 '대학생 징집조치'는 당시의 주무부처가 정당하게 입안·시행한 국가시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성희씨 등 5명의 사망사건에 대해 위원회의 서한을 접수할 때까지도 전혀 알지 못해 위원회의 문의에 답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머잖아 전씨에 대해 2차 소환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 출석거부 전두환씨

### 내주초 재출석 통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3일 1980년대 이뤄진 대학생 강제징집사업(녹화사업) 조사와 관련,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내주초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계엄합수부장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수사단장 이학봉씨에게도 각각 17일과 19일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kr

### 의문사위, 전씨 2차출석요구(종합)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오는 20일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녹화사업'이 5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권안보를 위한 학원대책의 일환으로 계엄상황에서 강제징집 조치와 연동돼 실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씨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당초 지난 10일 전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전씨가 '5공화국 당시 시행된 강제징집은 헌법과 법률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된 국가시책'이란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위원회는 또 당시 계엄합수부장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학봉 당시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각각 17일과 19일에 출석토록 요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녹화사업이 1980년 계엄체제하에서 본격화돼 1981년 12월 '국방부와 내무부간 합의각서' 체결 후에는 초기 양환자와 간염환자, 간질환자까지 강제징집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제징집은 1971년 10월 교련반대 시위 등 권위주의 통치에 반대한 학원시위에 대해 박정희 정권이 가담학생들의 '사회격리'를 목적으로 강제징집을 실시했다는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께 국방부 문서보존실을 방문, 1981년 12월5일 작성된 '국방·내무장관 합의(각서)' 등의 존안자료를 확인하는 실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zitrone@yna.co.kr

(끝)

# “녹화사업, 국방-내무 합의각서 조사”

## 의문사진상규명위 단서 확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3일 지난 1980년대 초 이뤄진 '녹화사업'과 관련해 당시 주영복 국방장관과 서정화 내무장관이 합의각서를 체결해 군 면제 사유가 있는 대학생들까지 강제 징집한 단서를 잡고, 합의각서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최근 기무사령부가 보낸 녹화사업 관련 답변을 보면, 81년 12월 작성된 '국방·내무장관 합의(각서)'를 근거로 경찰이 운동권 대학생들을 연행한 뒤 기록 일체를 군에 넘겨 바로 군입대 절차를 밟도록 했다"며 "특히 합의각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연령 미달이나 신체상태 등으로 인해 군 면제 대상이 되는 학생들까지 모두 강제징집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2년 강제징집돼 83년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성균관대 학생 이윤성(당시 21살)씨도 2대 독자로써 군 면제 대상이었으며, 지난 8월

초 규명위의 조사에 응했던 녹화사업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찰에 연행된 지 24시간 안에 전방 군부대로 호송돼 입영영장 발부나 징병검사 절차 없이 현역병으로 징집됐다고 밝혔다.

한편, 규명위는 녹화사업 조사를 위해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당시 계엄사 합수부장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학봉 합수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각각 19일과 17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훈 취재기자 idun@hani.co.kr

## 전두환씨 출석 다시 요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80년대 대학생 강제 징집 및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 지난 10일 1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 의문사위, 노태우前대통령 17일 소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3일 5공화국 초기 운동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강제징집 조치와 관련, 80년 당시 계엄합동수사본부장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과 수사단장을 지낸 이학봉씨를 각각 오는 17일과 18일 오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규명위는 강제징집 조치와 관련, 국방부가 담당할 역할과 내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4일 오전 국방부를 실지조사할 계획이다. ●이세영기자



# “강제징집 박정희때 시작”

## 의문사추 “5공때 암환자도 녹화사업”

5공 시절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던 학생운동 관련자에 대한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업(녹화사업)이 박정희(朴正熙) 정권시대 때도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5공 시절 암환자와 간질환자에 대해서까지 녹화사업(강제징집)이 자행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3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1971년 10월 교련반대 시위 등 권위주의 통치에 반대한 학원 시위에 대해 박정희 정권이 가담 학생들의 사회격리를 목적으로 강제징집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박정희 시대의 징집 시스템에 대해서는 의문사

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중점적으로 조사하지 못했지만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70년대의 강제징집 시스템이 80년 계엄통치를 거치면서 확대되고 보다 악랄한 형태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는 녹화사업이 80년 계엄 체제하에서 본격화돼 81년 12월 ‘국방부와 내무부의 합의 각서’ 체결 후에는 초기 암환자(한양대 81학번 원모씨), 간질환자(서울대 81학번 김모씨)와 간질환자(한양대 81학번 이모씨) 까지 강제징집됐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 의문사위, 국방부 실지조사 실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4일 국방부를 방문해 1980년대 초 대학생 강제입영시스템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는 실지 조사를 벌였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김준곤 상임위원등 위원회 관계자 6명이 국방부 문서보존실에서 실지조사를 벌여 1981년 1월 10일 작성된 국방부 명의의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등 40여건의 강제징집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5공 정권의 정부기관들이 학원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군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방부-내무부 장관 합의각서(80년 12월 5일 작성)', '학적변동자 병적기록표기 관리' 등의 문서는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확인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조만간 자료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자료가 확보되면 조사 후 문서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zitrone@yna.co.kr

(끝)

### '녹화사업 쏘씨 관여' 국방부서 문건 발견 의문사추 첫 실지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14일 실시한 국방부 실지조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학생 강제징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문건이 발견됐다.

의문사위 김준곤 제1상임위원은 "국보위 실천과제 등(1980.9.26)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하달'(1981.1.10) 등 40여개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들 문서는 전씨에 대한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2000년 10월 출범 이래 관계기관을 실지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집 인근에서 의문사위의 2차 출석요구(20일 오전 10시)에 응해 녹화사업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배장수기자 cameo@kyunghyang.com

### 의문사추, 국방부 첫 현장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4일 오전 10시 김준곤 상임위원 등 6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방부에 대한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이 실지조사는 1980년대 초반에 이뤄진 강제징집 조치와 관련, 국방부의 역할 및 내무부 등 유관기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지조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국방부 문서보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81년 12월5일 작성된 '국방-내무장관 합의각서' 등 당초 목

적했던 4종의 존안자료에 대해서는 찾아내지 못했으나 강제징집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준곤 상임위원은 밝혔다.

김준곤 상임위원은 또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하달된 '국보위 실천과제'(80년 9월26일 작성)와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시달'(81년 1월10일 작성) 등 40여건의 새로운 자료목록을 확인했다며 이 자료들을 열람하기 위해 국방부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윤해기자 justice@kmib.co.kr

### '녹화사업' 집단소송

민주화운동정신 계승국민연대는 15일 "1980년 초 운동권 대학생들의 강제징집 사업이었던 '녹화사업'과 관련,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녹화사업 관련 피해자 중 81년 강제징집돼 군내 좌경세력 조작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던 피해자들을 모아 당시 녹화사업 입안자였던 5공화국 권력 핵심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이라며 "이 중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남궁옥 기자

### 장도리 박순찬



### 전 대통령 출석거부 항의집회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등 의문사 관련단체 회원 20여명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씨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석요구 거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5공 시절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과 관련, 책임자인 전씨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전씨는 당시 강제징집이 적법하게 시행된 국가시책이라고 주장하며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문사위는 지난 10일 전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전씨가 출석에 불응했으며, 지난 13일 2차 출석요구서를 전씨측에 보내 오는 20일까지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karlle@yna.co.kr

(끝)

### 한겨레



“전두환씨 녹화사업 규명 협조물” 16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부근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회원 10여명이 “전 전 대통령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출석해 녹화사업의 진상을 밝혀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황석주 기자 stonepole@hani.co.kr

### 의문사위, '허원근 일병 총기 살해 당했다'

군 부대 내에서 술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병의 죽음을 군이 자살로 조작한 사실이 18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는 오늘 지난 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육군 모 사단에서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허원근 일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허 일병이 타살됐으며, 그동안 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 왜곡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는 지난 84년 4월 2일 새벽 3시쯤 술에 취한 모 하사관이 허 일병에게 M16 소총 한 발을 발사해 숨지게 했으며 이어 시신을 창고로 옮겨 두 발을 더 발사해서 허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부대 간부들은 대책 회의를 거쳐 '중대장의 학대를 비판한 총기 자살'로 허 일병의 죽음을 왜곡해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02-08-20-14:15 박진영 기자

노태우前대통령 소환 불응  
의문사위, 재소환 여부 검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녹화사업'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소환에 불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까지 출석을 요구했던 이학봉

전 수사단장도 위원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위원회 출석거부에 따른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들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조만간 회의를 열어 2차 소환장 발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2차 출석요구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일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이세영기자

노태우前대통령 소환불응  
의문사위, 2차소환 검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9일 군 '녹화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이날로 예정된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외에 17일까지 출석

하도록 요구받은 이학봉(李鶴捧) 전 보안사 수사단장도 역시 소환에 불응했다고 진상규명위는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2차 소환장 발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는 1980년 초반 강제징집된 운동권 대학생들에게 프락치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노 전 대통령과 이씨에게 13일 소환장을 보냈다.  
손호림기자 arysong@donga.com

[뉴스 9]의문사위, 사병 총기사망사고 조직적 은폐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18년 전 군부대에서 자살한 것으로 발표되었던 한 일병의 죽음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상관이었고 군 간부들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화천군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허원근 일병이 부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84년입니다. 당시 세 발의 총탄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군 헌병대는 원한 관계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총을 세 발이나 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분명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목격자들이 나타나 18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김준곤(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당시 현장에 있었던 10여 명의 병사 중 일부로부터 타살 현장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기자: 현장에서 탄피 하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보고된 사망 시각이 제각각인 점도 단서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육군 모 하사관이 내무반에서 우발적으로 한 발을 쏘 허 일병을 숨지게 한 뒤 인근 창고로 옮겨 두 발을 더 쏘았다는 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입니다.

◎허영춘(고 허원근 일병 아버지): 바로 후송을 했으면 살아 있을 사람을 두 발을 쏘서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해 버린 겁니다.

◎기자: 사실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도 확인되었습니다. 중대 간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갖는가 하면 살해 흔적을 없애기 위해 내무반 물청소까지 실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이후 군에서 일어난 총기사망사고가 타살로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 의문사위 기무사 실지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1일 5공시절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 기무사를 상대로 문서자료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를 벌인다.

김준곤 상임위원 등 위원회 관계자 7명은 이날 오전 기무사를 방문, '녹화사업'관련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문서규정집과 녹화사업당시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가 생산한 자료, 각 개별사건과 관련해 보안사 또는 각 예하부대에서 생산한 자료등을 확인한다.

그러나 기무사는 녹화사업관련자료를 지난 92년 모두 소각해 관련자료가 없으며 문서규정집은 기밀사항이어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와 실지조사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의문사위는 지난 7일 국가정보원을 방문, 의문사 관련자료 등의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를 시도했으나 '정보기관의 성격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정원 측의 거부로 실지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 의문사위, 기무사 실지조사 못해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5공 당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 기무사를 상대로 실시하려던 실지조사가 무산됐다.

김준곤 상임위원 등 위원회 관계자 7명은 21일 오전 기무사를 방문, 김두황씨 의문사 등 '녹화사업' 관련 사망사건 11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문서규정집과 녹화사업당시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가 생산한 자료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기무사측은 '녹화사업 관련자료를 지난 92년 모두 폐기해 자료가 없으며 문서규정집은 기밀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녹화사업 당시 보안사 담당자가 '녹화사업 심사자 1천여명과 전체 관련자 5천여명의 존안자료를 생산해 인수인계했으며 이는 영구문서로 보존돼 기무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근 위원회에서 증언했지만 기무사는 자료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기무사측은 "정부부처 주도로 실시된 강제징집제도가 84년 9월 폐지됨에 따라 녹화사업도 종료되면서 84년 12월 보안사의 담당부서도 해체됨과 동시에 녹화사업 관련 자료도 대부분 파기됐다"고 밝혔다.

기무사측은 또 2001년 12월18일부터 12월24일까지 특별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녹화사업 관련 자료는 업무특성상 최초부터 문서보존실에 이관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실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자료도 90년 10월 윤석양 사건 발생 당시 사령관의 지시로 전량 파기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기무사가 실지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기무사령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중이다.

이에앞서 의문사위는 지난 7일 국가정보원을 방문, 의문사 관련자료 등의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를 시도했으나 '정보기관의 성격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정원측의 거부로 실지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이날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등 의문사 관련단체 소속 20여명은 기무사 앞에서 실지조사 협조와 기무사령관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zitrone@yna.co.kr

(끝)

### 기자의 눈 **全-盧-기무사의 의문사 버티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위원과 조사관 등 7명은 5공화국 당시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프락치로 활용하는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21일 국군기무사령부(전 보안사령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현장조사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무사 측은 "84년 녹화사업이 종료됐고 당시 보안사의 담당 부서도 해체되면서 관련 자료 대부분이 파기됐다"며 조사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측은 "당시 보안사의 녹화사업 담당자가 '녹화사업 심사자 1000여명과 전체 관련자 5000여명의 존안자료를 생산해 인수 인계했으며 이는 영구문서로 보존돼 기무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회에서 증언했다"며 반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음 달 16일 활동 기한이 끝나는 진상규명위는 기무사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과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 등 사건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각종 의문사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녹화사업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19

일로 마감된 1차 출석 요구에 아무 답변 없이 응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도 1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정책 집행"이었다며 출석을 거부했고 2차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로서는 '동행명령'을 한 번 더 내린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 뿐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날 기무사 앞에서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소속 회원 20여명이 기무사 측의 자료제출 거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아들 허원근(許元根) 일병의 억울한 죽음을 18년 만에 밝혀내고 시위에 참가한 허영춘(許永春)씨는 "억울한 죽음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문사 조사에 대한 관련 기관과 관련자들의 협조를 기대해 본다.



손 효림 사회부

aryssong@donga.com

### 軍녹화사업 현장조사 기무사 거부로 무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1일 오전 상임위원과 조사관 등 7명을 서울 소격동 국군기무사령부로 보내 5공 당시 '군(軍) 녹화사업' 관련 문서자료에 대한 실지조사(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기무사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의문사위는 또 이날 기무사측에 '보안사 및 예하부대 관련 사망사건 11건에 관련된 기본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기무사측은 "녹화사업 관련 자료는 없으며 기본자료도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의문사위측은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녹화사업 관련 17개 캐비닛 분량의 영구 보존문서를 기무사에 인계했다는 당시 보안사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며 기무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容均기자 agon@chosun.com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실지조사가 벌어진 21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기무사 정문 앞에서 실지조사 협조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정근기자

## 기무사, 의문사 자료열람 거부

### • 軍녹화사업 실사 안팎

21일 오전 5공화국 시절 군의 녹화사업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여줬다며 국군 기무사를 찾은 의문 사진상조사위원 10여명이 부딪친 것은 진실이 아닌 권력기관의 벽, 그 자체였다.

법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나선 정부기관 관계자들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기무사 정문 앞 수십명의 전경들이었다. 모르는 이가 보기에 는 반체제 시위대라도 물려올까 대비하는 모습이나 다를 게 없었다. 다음에 벌어진 것은 기무사 소속 대령과 조사위원과의 실랑이. 전루복에 헬멧까지 쓴 대령은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문 통과를 허용할 수 없다"며 후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전부였다. 10여일 전에 기무사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구두확약까지 받은 의문사위 관계자들은 "예우까지 바라지는 않았지만..."이라면서도 고개를 내저었다.

조사위원들은 결국 기무사측의 주장대로 담장 모퉁이를 돌아 국군 서울지구병원을 통해 기무사

에 들어갔다. 그러나 겨우 1시간 만에 자료열람을 거부당하고 빈손으로 돌아나와야 했다. "정보기관 문서고의 존안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버티는 기무사측에 법규정을 들이대며 항의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 의문사위 정문통과 저지 軍 조사 비협조 빈손귀가

힘없이 발길을 돌린 의문사 조사위원들은 "의문사특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추가적인 실지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체념하다시피 했다.

의문사위의 활동 기간이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사실을 상기해낸 한 조사위원은 "활동 시한 연장과 조사권 강화라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억울하게 숨진 영혼들을 달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들에게 언제까지 더 기다려달라고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날 같은 시각 인근 동심자로 건너편 경복궁 경내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철거한 구 총독부 자리에 근정전 중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김용기자

## 녹화사업 기무사조사 무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5공 당시 학생운동 가담자에 대한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업(녹화사업)과 관련, 21일 기무사를 상대로 실시하려던 실지조사가 무산됐다.

김준곤(金俊坤) 상임위원 등 위원회 관계자 7명은 21일 오전 기무사를 방문, 녹화사업 관련 사망사건 11건과 관련한 보안사 제작 자료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기무사측은 "녹화사업 관련자료는 1992년 모두 폐기해 자료가 없으며 문서규정집은 기밀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측은 "녹화사업 당시 보안사 담당자가 녹화사업 전체관련자 5,000여명의 존안자료를 작성해 인수 인계했으며 이는 영구 문서로 보존돼 기무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근 위원회에서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 전·노씨등 동행명령장 발부키로

### 의문사규명위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 1980년대 초 대학생 강제징집과 강제 징집 대학생에게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당시 이학봉 수사단장, 서정화 내부부장관 등 4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20일 규명위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 등도 위원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 손·盧씨 등에 동행명령장

## 의문사추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의문사위는 25일 강제징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5공 시절의 '녹화사업'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학봉 전 보안사 수사단장, 서정화 전 내무부장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전대통령은 지난 10일과 20일 두차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노전대통령 등도 위원회의 소환에 불응했다.

김용기자 701osa@kyunghyang.com

# “녹화사업 자료 소각”

전 보안사과장, 의문사위 조사뒤

1980년대 군의 '녹화사업'을 조사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6일 '82년 이후 보안사령부 심사과장으로 '녹화사업' 실무를 관장했던 서아무개 씨가 녹화사업과 관련된 업무기록을 모두 소각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서씨는 녹화사업 비용, 조직원 활용 등을 담은 1983년 3~6월 녹화사업 관련 업무일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말했으나, 21일 재소환 조사 때는 소각장면이 담긴 사진 3매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또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당시 녹화사업의 기획문서인 '내무 국방장관 합의각서' 사본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 “전두환-노태우씨에 동행명령장”

## 의문사위,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공시절 강제징집 대학생에게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당시 이학봉 수사단장, 서정화 내무부장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동행명령장 집행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20일 두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며, 노 전 대통령 등도 지난 17일 아무런 회신없이 위원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37조 등에 따라 위원장이 1000만원 이하의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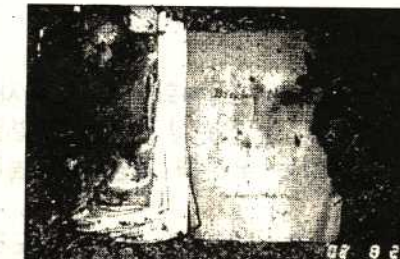
# 前 보안사 과장, 의문사추 조사직후 녹화사업 중요자료 소각

## 소각장면 촬영해 남겨

5공 시절 운동권 학생에 대한 강제징집 및 프락치공작사업(녹화사업)과 관련,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를 받은 핵심인물이 위원회에 녹화사업 중요자료를 남겨 주기 직전인 20일 이를 완전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관련자는 문서 소각 장면(사진)을 촬영해 의문사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26일 '1982년 당시 보안사령부 심사과 과장이었던 서의남(徐義男) 씨를 19일 소환, 개인적으로 보관 중이던 중요 관련 자료를 확인했으나 서씨가 이를 바로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씨는 21일 재소



환 때 소각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고 위원회가 서씨 집에 대해 재차 방문조사에 나서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소각한 문서는 강제징집자의 조사 및 프락치 공작내용과 당시 개별 책임자를 명시한 4개월에 걸친 보안사의 업무 일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의혹이 일고 있는 한영현씨

조사내용을 비롯, 녹화사업을 법정부처에서 실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무·국방·문교부 장관의 합의각서' 사본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씨는 의문사위 조사에서 '녹화사업 직접 대상자는 1,000여명, 관련자까지 합치면 5,000여명에 이르렀고, 보안사 군무 시절 17개 캐비닛에 관련 자료를 담아 타부처에 이관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히 '83년 이후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등은 녹화사업 자료를 토대로 종교, 노동, 학원가에 대해 '평화공작'이라는 대규모 좌경운동 색출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